

저출산 대응 국토 · 도시공간 계획 방향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023. 01.19 (목)

목차

- I. 배경 및 현황
- II. 저출산 원인과 공간계획
- III. 저출산이 국토·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V. 결론

I. 배경 및 현황

- ▶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성장률
- ▶인구구조의 변화 및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
- ▶ 낮은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감소
- ▶ 한국 지역별 합계출산율 감소 추세

I. 배경 및 현황

▶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성장률

- 2020년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0.14%로, 전 세계 인구 성장률인 0.98%에 못 미치며, 2040년에는 -0.35%, 2070년에는 -1.24%로 예측되며 **전체 인구는 3.8천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2022년 현재 5.2천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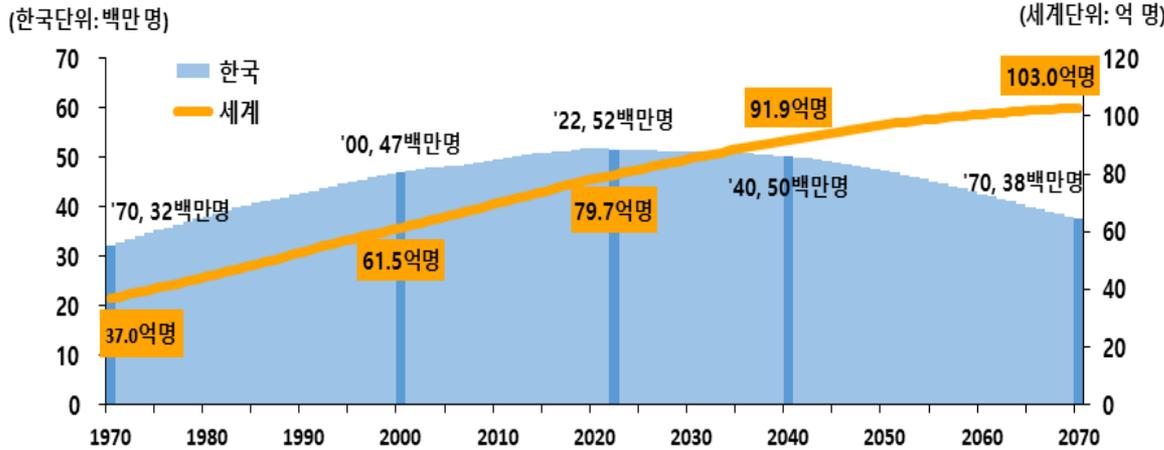


Figure 1. 세계와 한국의 인구 추이
출처: 통계청(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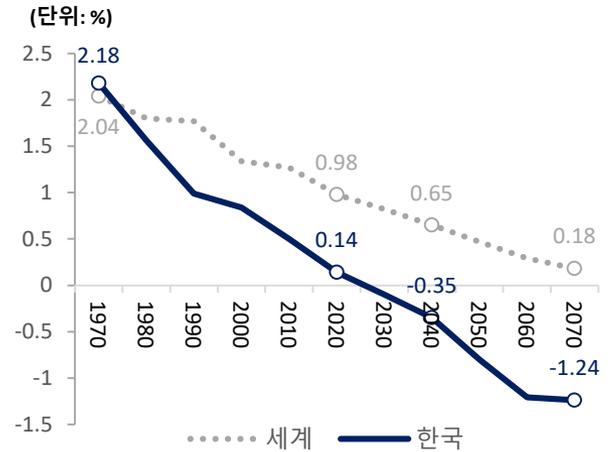


Figure 2. 세계와 한국의 인구 성장률 추이
출처: 통계청(2021)

- 2022년 세계인구에 대한 한국 인구의 비율은 0.6%이며, 2070년에는 0.4%로 감소. 또한 국가별 인구 순위에서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29위이나, 2070년 기준으로 59위로 전망
- 2020년 세계 인구 성장률은 0.98%이며, 2040년 0.65%, 2070년 0.18%로 지속적 감소 추이를 보임. 2070년 세계인구는 103억명으로 전망됨(2022년 79.7억명)

I. 배경 및 현황

▶ 인구구조의 변화 및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

- 대한민국의 고령인구(65이상)의 비율은 2070년 생산연령인구(15-65)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세계 생산연령인구보다 가파른 감소 추세를 보임
-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이는 1970년 대비 6배 증가한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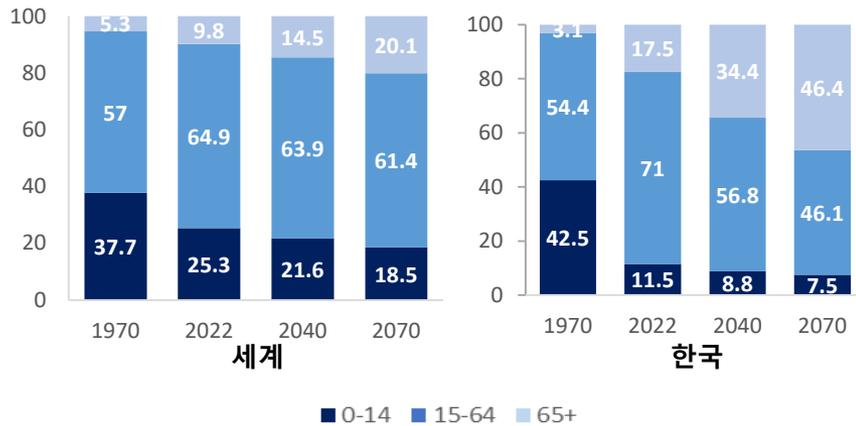


Figure 3.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출처: 통계청(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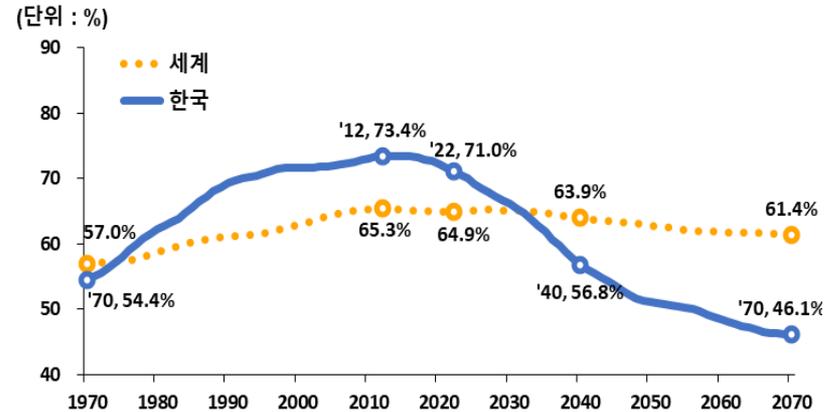


Figure 4.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출처: 통계청(2021)

-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은 2070년 46.1%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인구의 비율은 46.4%로 증가하여 노년부양비에 대한 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
- 영유아 비율은 1970년 대비 6배 가까이 감소한 7.5%로 전망됨

I. 배경 및 현황

▶ 낮은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감소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으며**, 2021년 출생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최저치를 달성

* 합계출산율 =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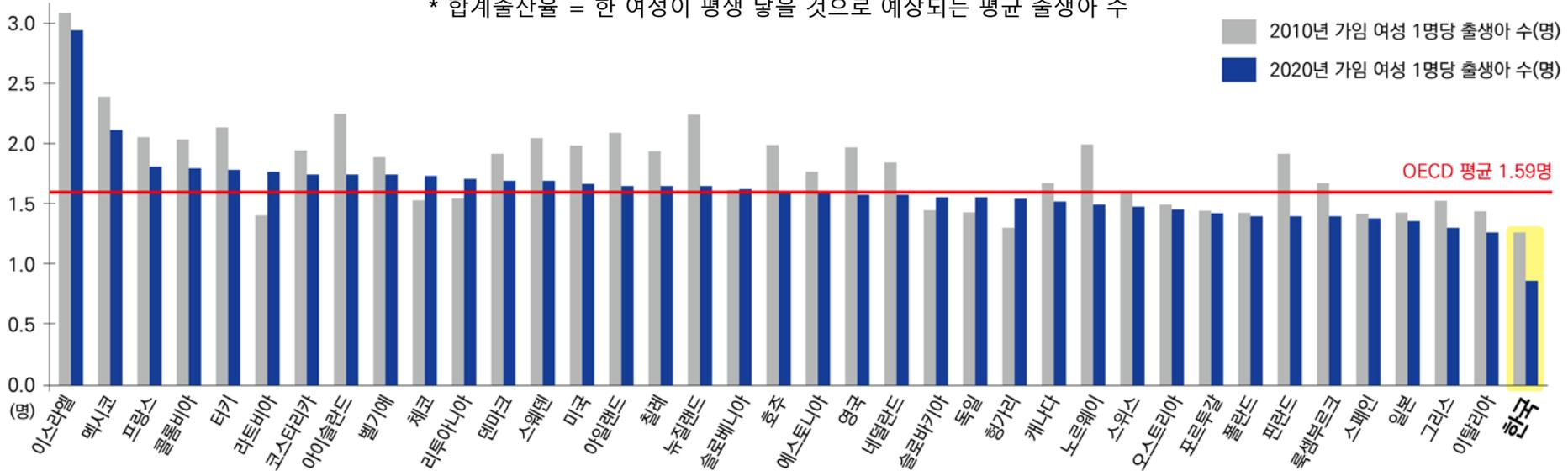


Figure 5. OECD 회원국의 2010, 2020 합계출산율 비교
출처: OECD, Family Database(2022)

-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유엔인구기금, UNFPA)의 통계 결과에서도 한국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조사대상 198개 국가 및 지역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
-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인종 0 ~ 14세 인구 비율도 12.3%로 최하위를 차지하였으며, 세계 평균 25.3%의 절반도 안되는 수치

I. 배경 및 현황

▶ 낮은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감소

-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약 26만명으로 전년대비 1.1천명(-4.3%) 감소
- 3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 출산율이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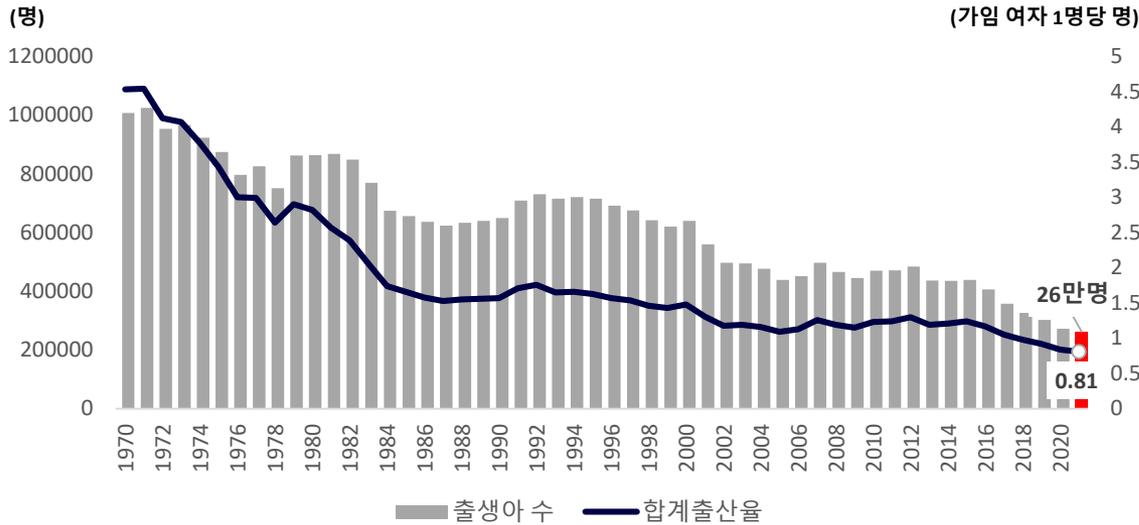


Figure 6. 대한민국 연도별 출생아수 및 합계 출산율
출처: 통계청(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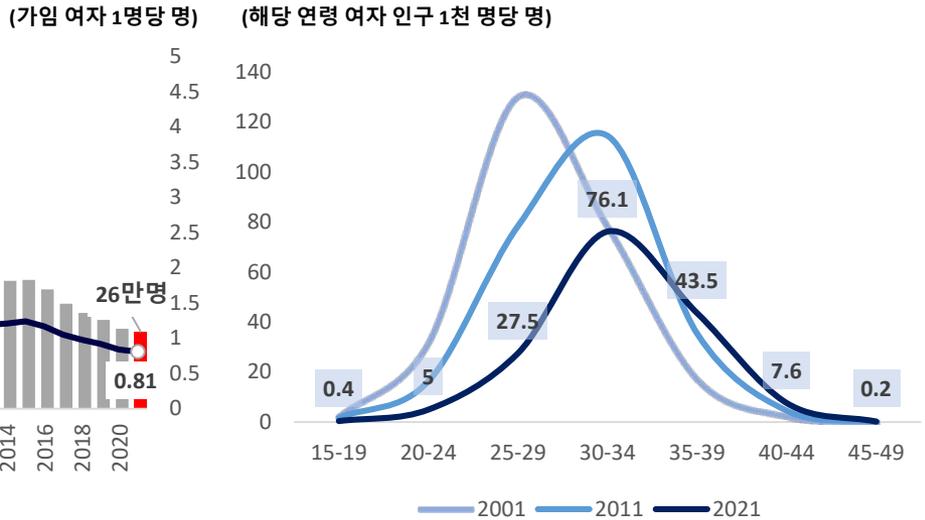


Figure 7. 대한민국 연도별 모의 연령별 출산율
출처: 통계청(2022)

- 2021년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가 76.1명으로 가장 높으며, 35-39세가 43.5명, 20-24세가 27.5명 순.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전년대비 0.2세 상승한 33.4세로 집계
- 20대 후반, 30대 초반 출산율은 각각 전년대비 10.3%, 3.6%로 감소하였으며, 30대 후반 출산율은 1.2명 증가

I. 배경 및 현황

▶ 한국 지역별 합계출산율 감소 추세

- 광주와 대전을 제외한 15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 전년대비 감소**
- 세종(1.28명)이 가장 높고 서울(0.63명)이 가장 낮음. 특별시와 광역시와 같은 도시의 **저출산 상황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남
- 시도간 합계출산율 격차는 최대 0.65명(세종 제외시 최대 0.39명), 주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출산율에서 **지역간 격차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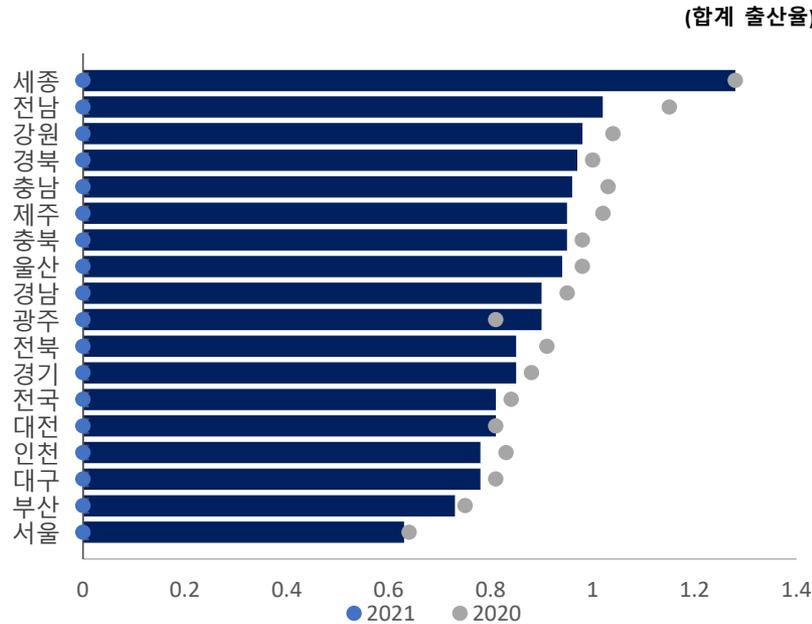


Figure 8. 지역별 합계출산율 및 순위
출처: 통계청(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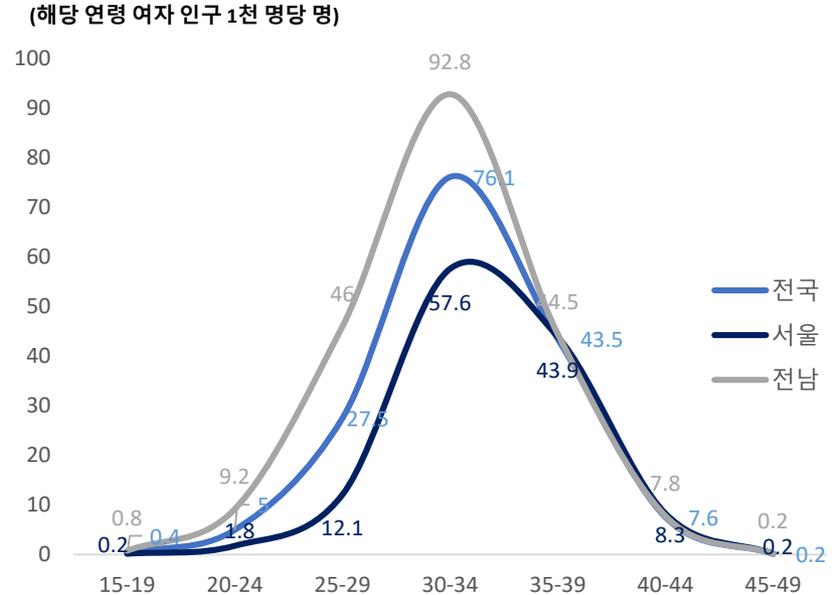


Figure 9. 전국과 서울 연령대별 1천명 당 합계출산율 비교
출처: 통계청(2022)

I. 배경 및 현황

▶ 한국 지역별 합계출산율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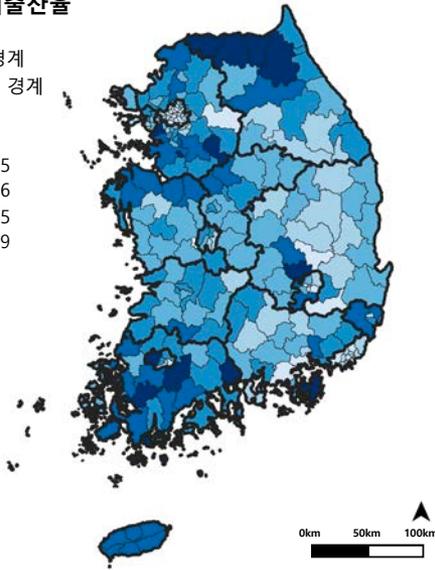
- 2000년 전국 시군구 단위로 합계출산율 분포 현황을 통해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가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그룹으로 분류되며, 강원도,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 등이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그룹인 것을 확인
-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아져 한국 전체적으로 저출산 현상은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전남 영광군(2.455%), 장흥군(1.772%) 등의 경우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음.

Table 5. 2020년 합계 출산율 상위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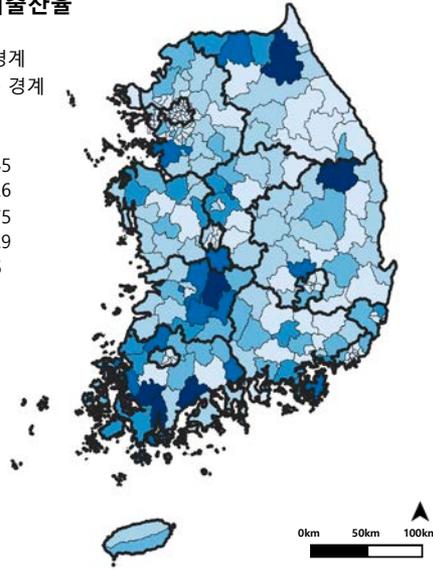
시군구		합계출산율
전남	영광군	2.455
	장흥군	1.774
	임실군	1.749
	해남군	1.668
전북	순창군	1.66
강원	철원군	1.656
전북	진안군	1.637
경북	의성군	1.598
전남	장성군	1.509
	고흥군	1.459

출처: 통계청(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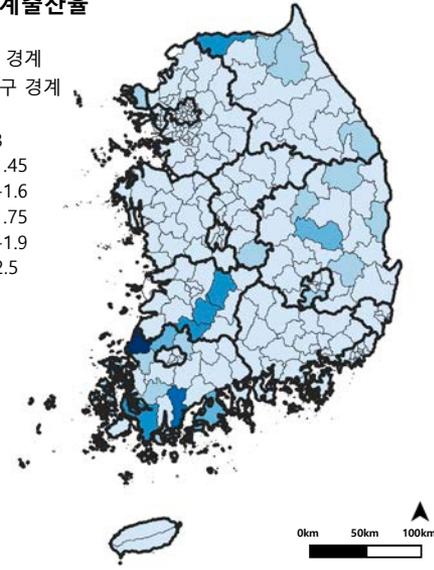
2000년 합계출산율
Legend



2010년 합계출산율
Legend



2020년 합계출산율
Legend



II. 저출산 원인과 공간계획

- ▶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고용 불안정 및 경제적 부담
- ▶ 일-가정 간 양립 문제
- ▶ 돌봄체계 서비스 및 교육 품질
- ▶ 출산·양육친화적 도시환경 미비

II. 저출산 원인과 공간계획

▶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사회규범과 가치, 경제·사회적 요인, 도시 및 지역사회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Table 1.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역		요인
사회규범과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주의적 가치관의 변화 부부의 양육부담 증가 자녀 출산에 대한 의미 변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경제·사회적 요인	경제여건 및 노동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IMF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소득 및 고용불안정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노동시장 경직성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미혼남녀의 고학력화: 고학력·전문직 여성의 기회비용 상승 성인자녀 독립시기
	일-가정 양립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역할 분업의 강조: 부부 간 가사노동 불평등 가족친화제도(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 미비
	주거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비 부담
	자녀양육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보육교육비, 자녀 사교육비
도시 및 지역사회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및 지역사회의 안전성 보육 및 육아시설 지원

출처: 천현숙, 2013

II. 저출산 원인과 공간계획

▶ 고용 불안정 및 경제적 부담

- 경기침체와 비정규직 증대 등 고용불안, 노동환경의 불안정성이 결혼 및 출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결혼과 출산 포기는 청년 나름의 생존 전략. (최영미·박윤환, 2019)
- 통계청(2019)의 저출산 원인 조사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직장 불안정 또는 일자리 부족'과 '자녀양육 부담'과 같은 경제적 원인을 언급

Table 2. 개인특성별 출산 지연 및 기피 이유에 대한 비율

특성		직장불안정 일자리부족	결혼, 출산 가치관 변화	출산 후 여성의 경력단절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부담	초혼 연령 상승	일,가정 양립 어려운 직장문화	기타
가구월평균 소득수준별	100만원미만	28.2	11.6	3.0	19.1	33.8	1.6	2.4	0.2
	100~200만원미만	28.0	13.0	5.7	20.7	26.6	2.4	3.1	0.4
	200~300만원미만	27.5	13.8	9.0	16.5	26.9	0.2	5.7	0.3
	300~400만원미만	22.6	16.0	9.1	16.2	30.9	0.3	4.6	0.2
	400~500만원미만	16.2	16.7	11.8	18.1	31.8	0.6	4.2	0.6
	500~600만원미만	19.7	22.3	10.7	14.5	28.3	0.0	4.4	0.0
	600~700만원미만	28.0	19.9	6.2	7.1	34.1	1.9	2.9	0.0
	700만원이상	13.1	18.8	9.3	15.1	39.6	0.0	3.8	0.3
성별	남자	26.8	15.0	5.1	18.7	28.8	1.1	4.2	0.2
	여자	20.6	16.2	11.3	15.4	31.6	0.5	4.1	0.3
혼인상태별	미혼	27.5	21.9	9.8	16.2	19.4	0.6	4.0	0.5
	배우자 있음	21.0	13.1	8.2	17.6	34.6	0.8	4.4	0.2

출처: 통계청(2019)

II. 저출산 원인과 공간계획

▶ 일-가정 간 양립 문제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이땅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따르면, 저출산 원인 중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소득 및 고용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육아지원기능 미흡,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을 논의함(정책기획위원회, 2008)
- 출산은 맞벌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계속해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은 자녀를 낳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저출산이 심화됨(이지은 외, 2019)
- 경제활동과 가사 및 양육의 양립을 방해하는 요인들로 인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지가 꺾임. 맞벌이부부의 경우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으로 출산을 축소하거나 포기(송유미·이제상,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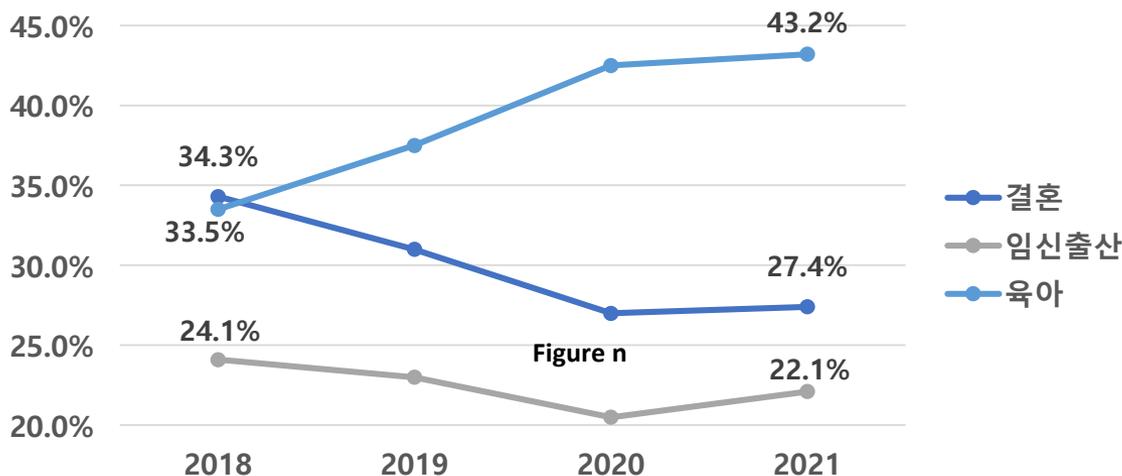


Figure 11. 여성의 경력단절사유
출처: 보건복지부(2022, p.6 재구성)

II. 저출산 원인과 공간계획

▶ 돌봄체계 서비스 및 교육 품질

- 첫째아를 출산한 가구가 둘째아 출산을 단념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보육 및 유아교육 시설과 관련된 요인을 지적함(김경수 외, 2018)
- 대한민국은 국가별 영유아 교육·보육(ECEC) 이용률은 2019년 기준 OECD 평균보다 높으나 2019년 기준 유치원 교사 수는 5만 2631명, 어린이집 교사수는 27만 7141명으로 이전 연도보다 유치원은 2261명, 어린이집은 1830명의 교사가 감소함
- 그에 비해 이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에 반해 교사 수는 감소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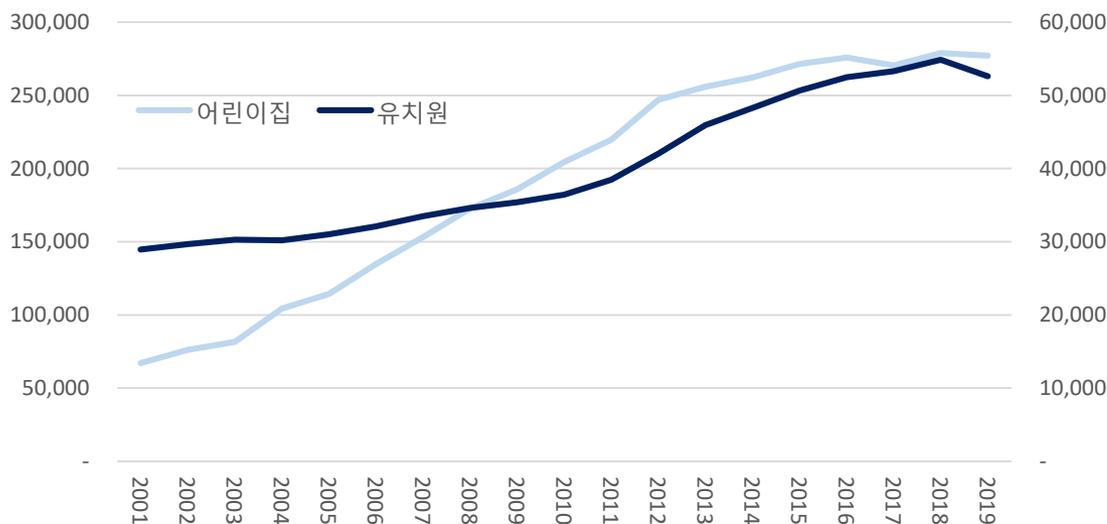


Fig12.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수 추이
출처: 흥인기(2020,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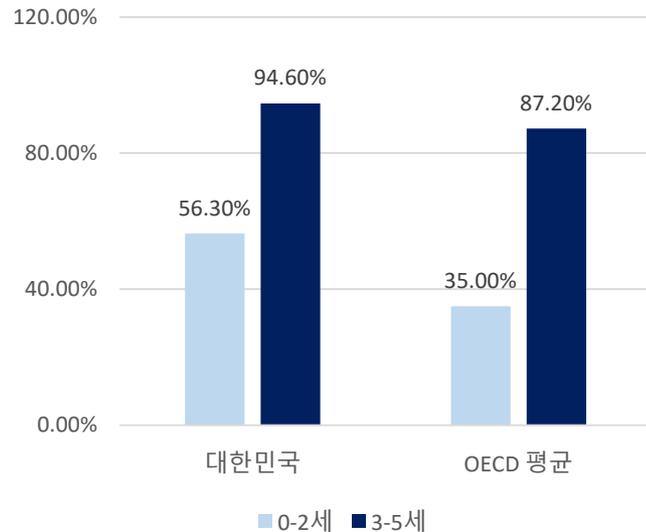


Fig13. 영유아 교육/보육 이용률
출처: 흥인기(2020, 재구성)

II. 저출산 원인과 공간계획

▶ 돌봄체계 서비스 및 교육 품질

- 돌봄 기관의 국공립화는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에서 의미 있는 정책. 하지만 전체 어린이집 시설의 3/4, 보육교직원과 이용아동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 격차 해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박선권, 2022)
- 민간 의존도가 높은 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 교사의 처우는 유치원(국공립/사립), 어린이집(국공립/직장/민간 등) 내의 격차도 심각. 2021년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본급 실태조사 결과, 경력반영이 되지 않은 월 급여는 179만원, 사립유치원 교사의 월평균 급여(세전)는 200만원으로 나타남(최은영,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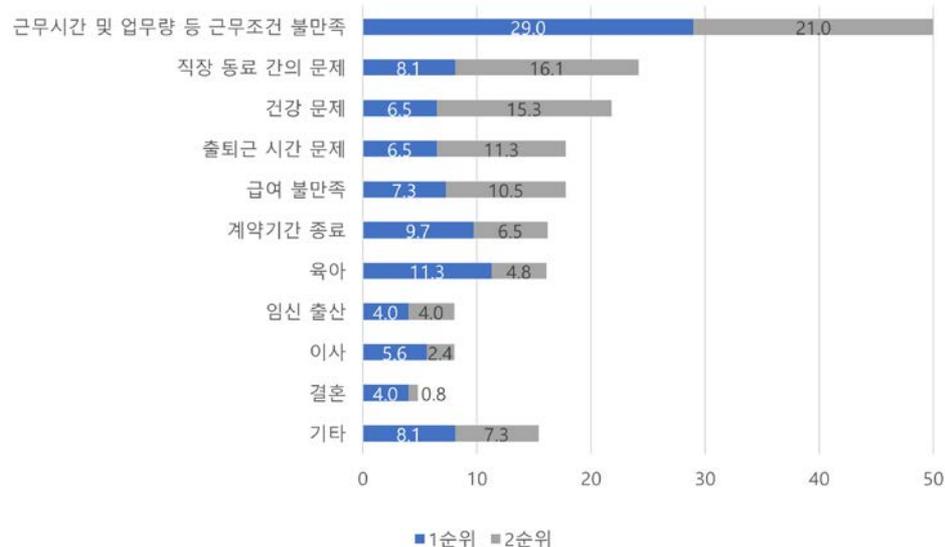


Figure n. 이직을 계획하거나 고민 중인 이유
출처: 양미선 (2020, p.18 재구성)

II. 저출산 원인과 공간계획

▶ 출산 · 양육친화적 도시환경 미비

- 영유아 부모들이 생각하는 양육하기 좋은 주거지 조건은 안전한 곳이 36.7%로 가장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가구소득이나 총 자녀수 등과 무관하게 모든 영유아가구에서 일관된 양상. 초등 이상의 교육환경이나 지역내 아동 관련 인프라, 보육환경 등보다도 우선시 됨(최효미, 2019)
- 인구감소는 주택의 노후화, 주거환경 악화를 유발하고 이는 범죄유발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결국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형성됨(박용숙,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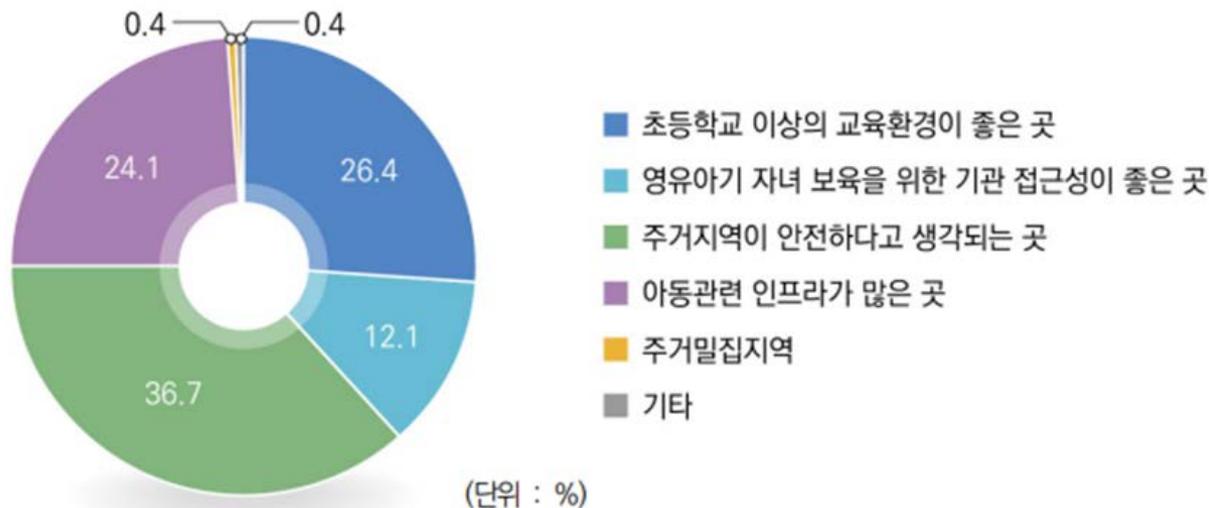


Figure 15.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의 조건
출처: 최효미(2019, p.3)

II. 저출산 원인과 공간계획

▶ 출산 · 양육친화적 도시환경 미비

-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여가시설(놀이터, 공원, 산책로) 및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장남간 대여센터, 도서관 이용)에 대한 이용 편리성을 5점척도로 평가를 진행
- 여가시설과 문화시설 모두 이용 편리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나, 여가시설에 비해 문화시설 편리성은 0.5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남

Table 15. 여가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구분	여가 시설 편리성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3.25	1.08	(1.864)	2.57	1.10	(1.855)
1세(2차)	3.15	1.07	(1.895)	2.51	1.06	(1.897)
2세(3차)	3.23	1.05	(1.771)	2.53	1.04	(1.770)
3세(4차)	3.12	1.02	(1.770)	2.50	1.02	(1.701)
4세(5차)	3.13	1.19	(1.673)	2.41	1.10	(1.672)
5세(6차)	3.13	1.18	(1.613)	2.43	1.09	(1.613)
6세(7차)	3.24	1.16	(1.656)	2.50	1.07	(1.565)
7세(8차)	3.18	1.18	(1.556)	2.92	1.15	(1.556)
8세(9차)	3.25	1.08	(1.525)	3.03	1.06	(1.525)
9세(10차)	3.38	1.03	(1.484)	3.16	1.06	(1.484)

출처: 육아정책연구소(2018, p.71)

II. 저출산 원인과 공간계획

▶ 출산 · 양육친화적 도시환경 미비

-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지정 및 설치
-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총 852건으로, 어린이의 이동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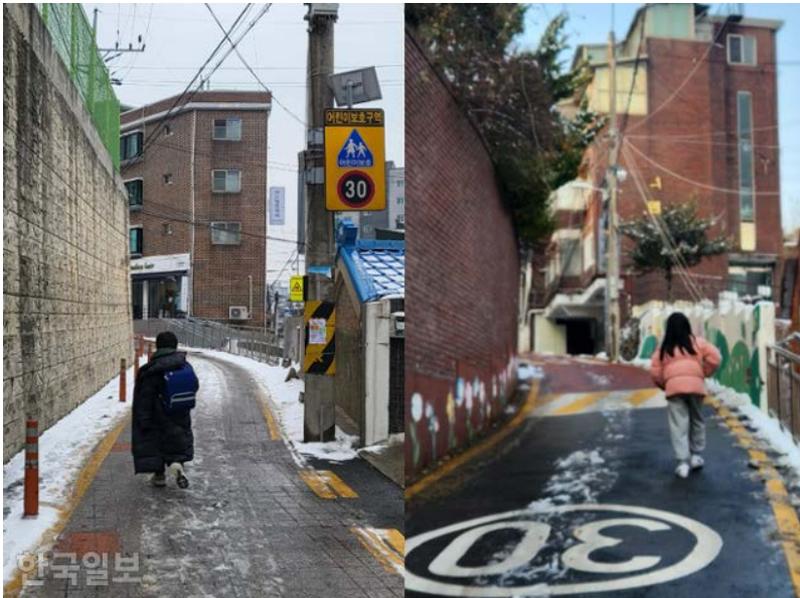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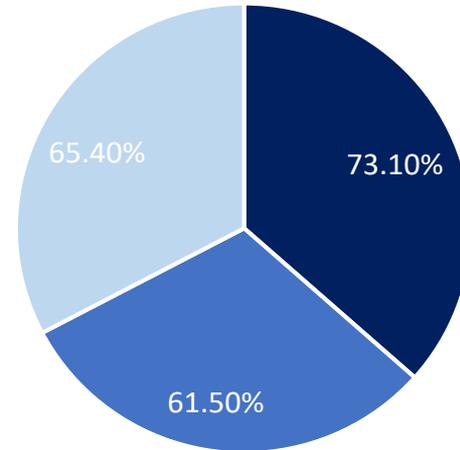


Figure 16. 스쿨존에 보행로가 없어 차도로 통행하는 모습
출처: 강지수 외(2019)



■ 보행로 없음 ■ 불법주차 ■ 보행자 신호등 없음

Figure 17. 스쿨존 사고 원인
출처: 강지수 외(2019, 재구성)

III. 저출산이 국토·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 ▶ 고령화 현상
- ▶ 도시기능의 저밀화
-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 ▶ 도시 소멸 위험

III. 저출산이 국토·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 고령화 현상

- 저출산은 기대수명 연장과 더불어 인구 고령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저출산 증가는 고령화를 촉진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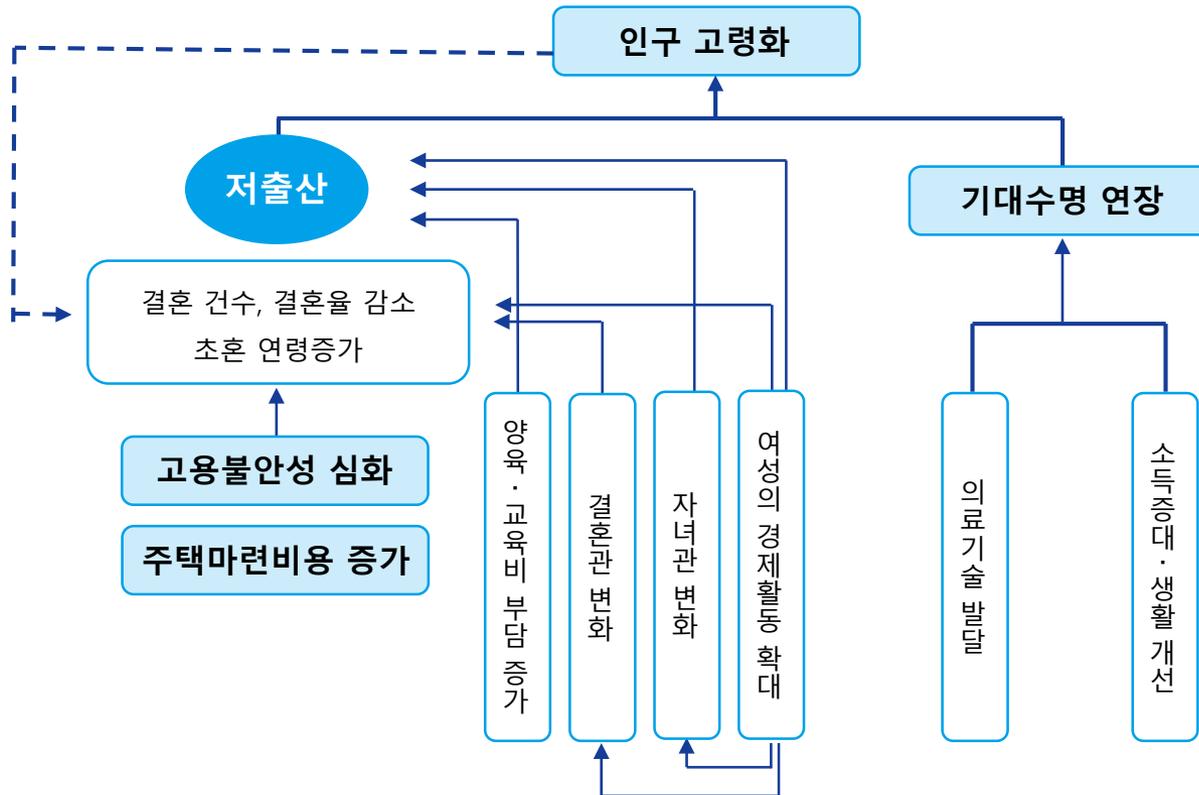


Figure 18. 저출산 및 고령화 원인
출처: 이상호 외(2010, p.7)

III. 저출산이 국토·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 고령화 현상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대책 수립을 하고 있음
- 한국은 매년 고령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사회에 진입 후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2050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40%를 초과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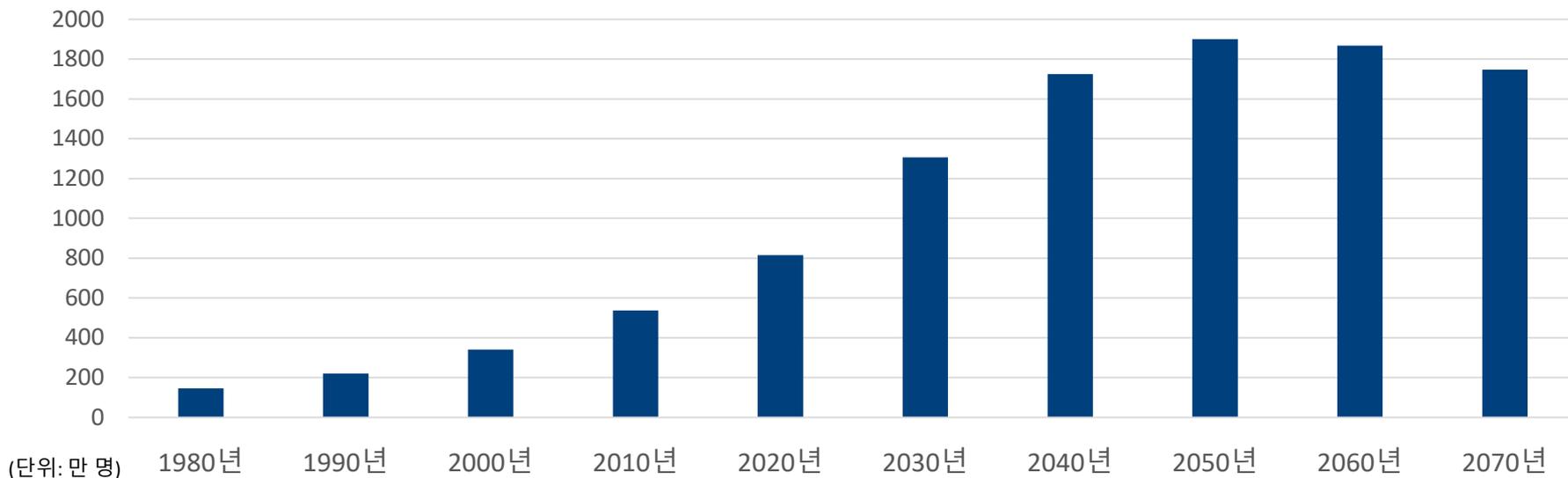


Figure 19.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
출처: 통계청 (2022)

III. 저출산이 국토·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 고령화 현상

- 저출산 및 고령화는 도시 지역에 경제, 사회, 공간적 분포에 영향을 끼치며, 수요 및 공급의 변화로 인해 고령친화적 도시개발 필요한 실정
- 저출산, 고령화는 노인 부양비 증가,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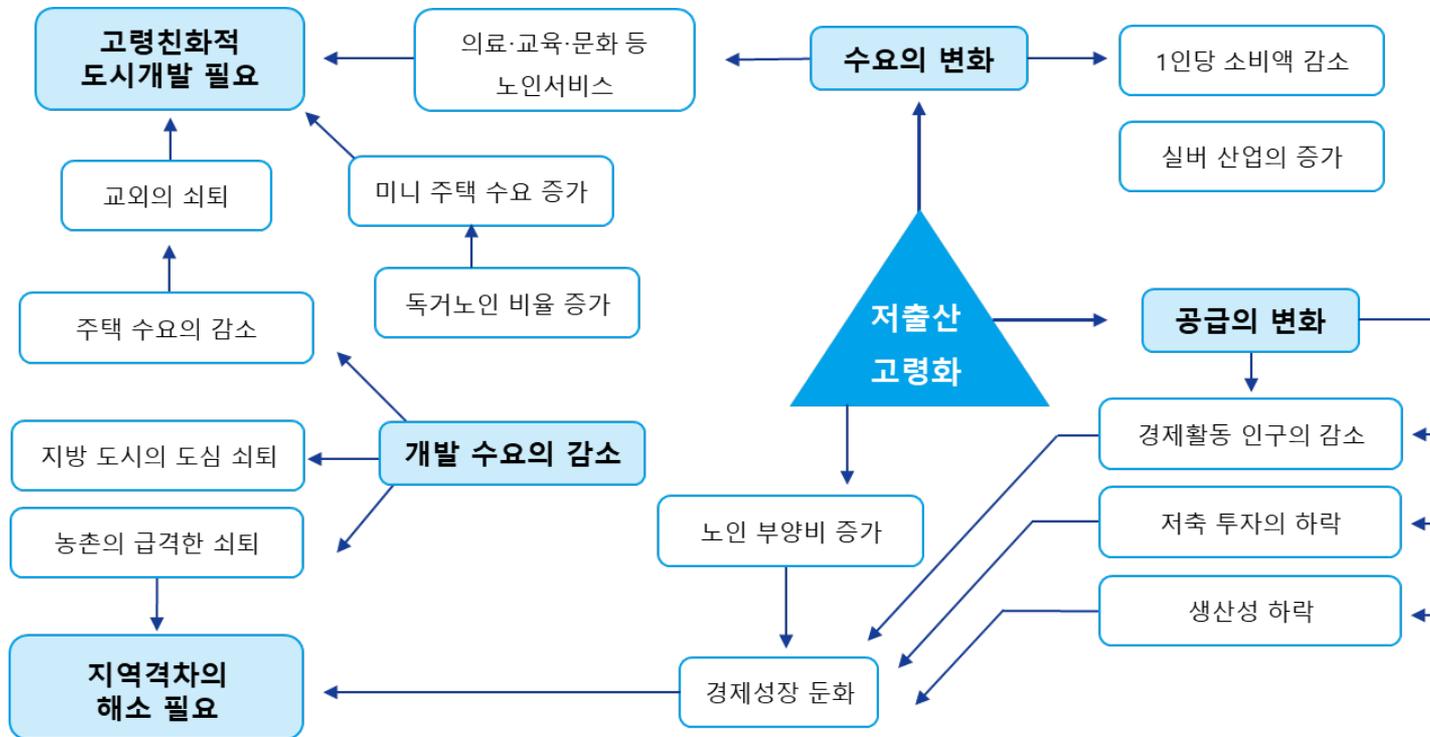


Figure 00. 저출산 및 고령화가 사회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상대 외, 2011, p.26)

III. 저출산이 국토·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 고령화 현상

-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연평균 증감률은 -3.1%로 37개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 또한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인구 감소 문제로 이어지며 경제활동 인구 감소, 노인부양부담 증가, 빈집 발생 등으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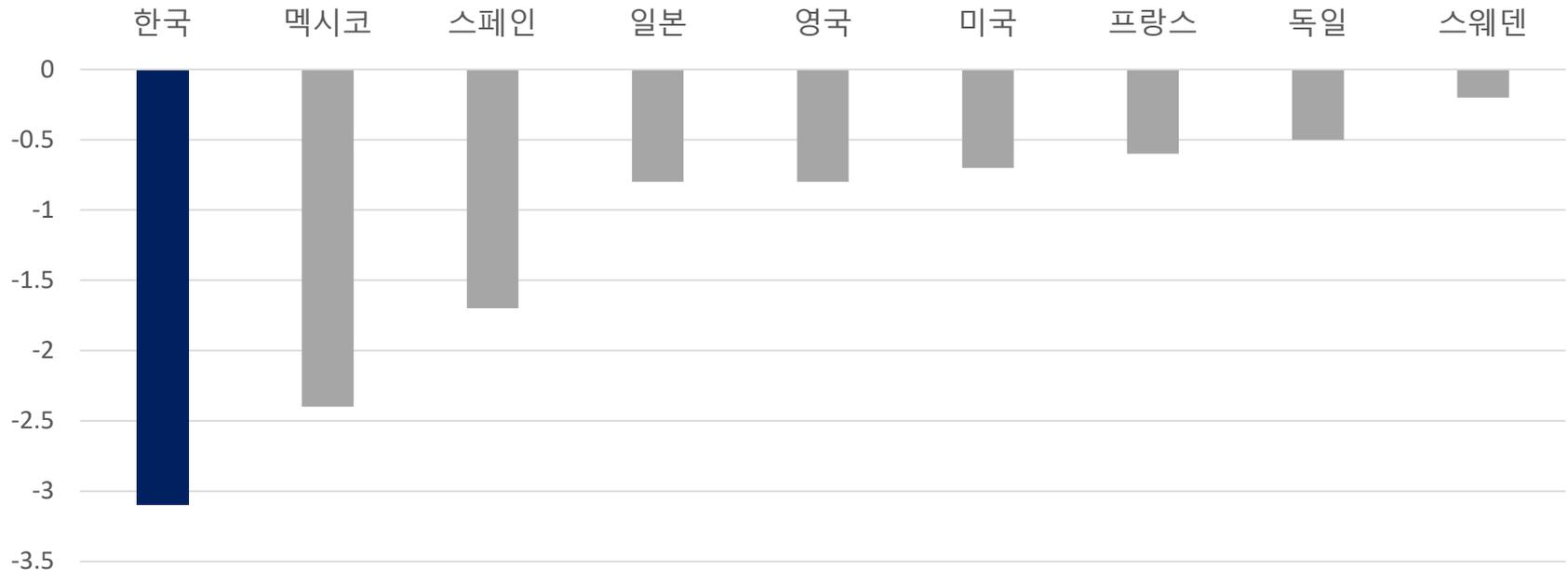


Figure 20. OECD 국가 합계출산율 연평균 증감률
출처: 한국경제연구원(2021, p.1)

III. 저출산이 국토·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 도시기능의 저밀화 – (1) 신도시 공실 문제

-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과도하게 측정된 계획인구 수준에 맞춰 외곽지역의 신도시 조성과 대규모 신규 택지 지구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음
- 이에 과하게 공급된 주택과 상업시설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함



Figure 00. 경기 고양 삼성지구 'e편한세상시티삼송' 단지 상가
출처: 이지은(2020)



Figure 00. 세종시 새롬동 상가
출처: 이희택(2020)

III. 저출산이 국토·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 도시기능의 저밀화 - (2) 빈집 방치 문제

-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고, 주택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빈집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강미나 외, 2017), 현재까지 계속해서 빈집은 증가하는 추세임
- '21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56,322개로 '10년 대비 3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 빈집 문제도 심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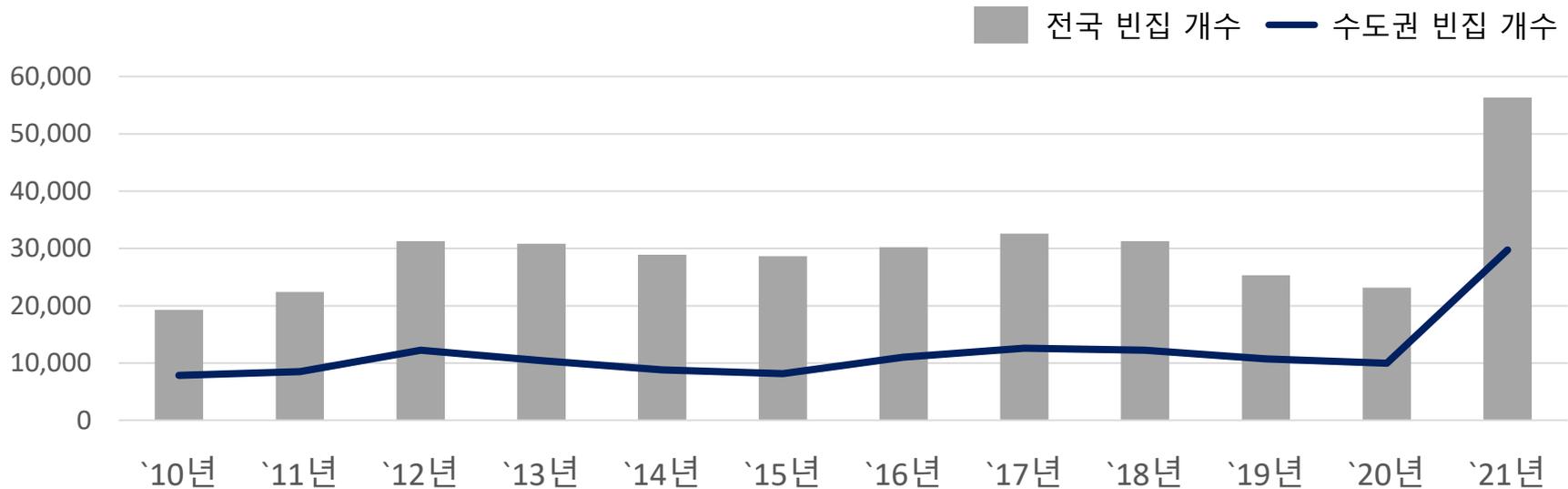


Figure 00. 전국 및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빈집 현황
출처: 통계청 주택총조사자료(2021)

III. 저출산이 국토·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 도시기능의 저밀화 – (3) 도시기반시설(학교) 공급 과잉

- 저출산 문제로 인구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현재 공급되어 있던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고, 이에 기존 기반시설들의 유희화 문제가 대두됨
- 특히, 취학아동 수의 급감으로 학교(초·중·고) 통폐합 문제와 이후 유희화된 미활용 학교 시설의 활용방안(매각, 임대 등) 문제가 심각함
- '21년 5월 기준으로 전국의 폐교 학교 수는 3,834개이고,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는 '22년 기준 3개(공진중, 은혜초, 염강초)가 폐교된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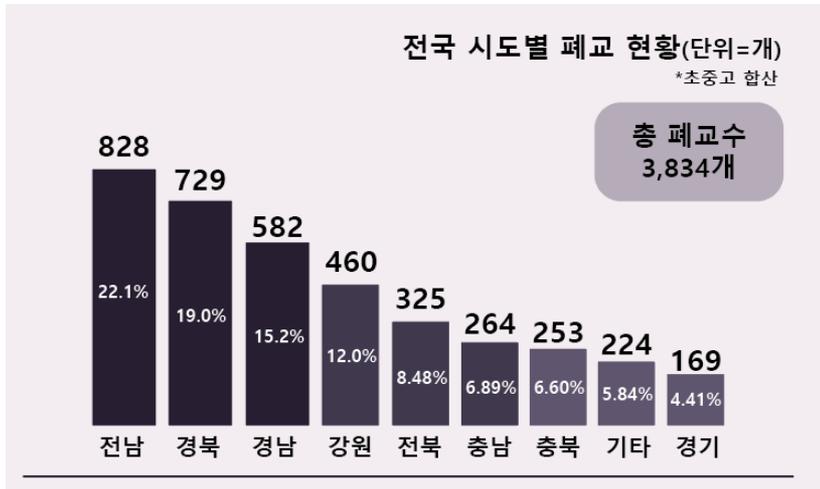


Figure 14. 전국 시도별 학교 폐교 현황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2020)



Figure 00. 미활용 폐교 모습 (경남 거제시)
출처: <http://www.geoj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148>

III. 저출산이 국토·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 인구감소 현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수요가 감소하였기에 긴급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시키는 방향이 적합함(김예성, 2017)
- 하지만, 필요한 시설임에도 단순히 지자체 자원 부족의 이유로 도시·군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의 기반시설 밀도는 낮아지고, 도시 내 난개발이 우려됨
- 감소하는 출산율이 반영된 장래 인구 추정치를 바탕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 및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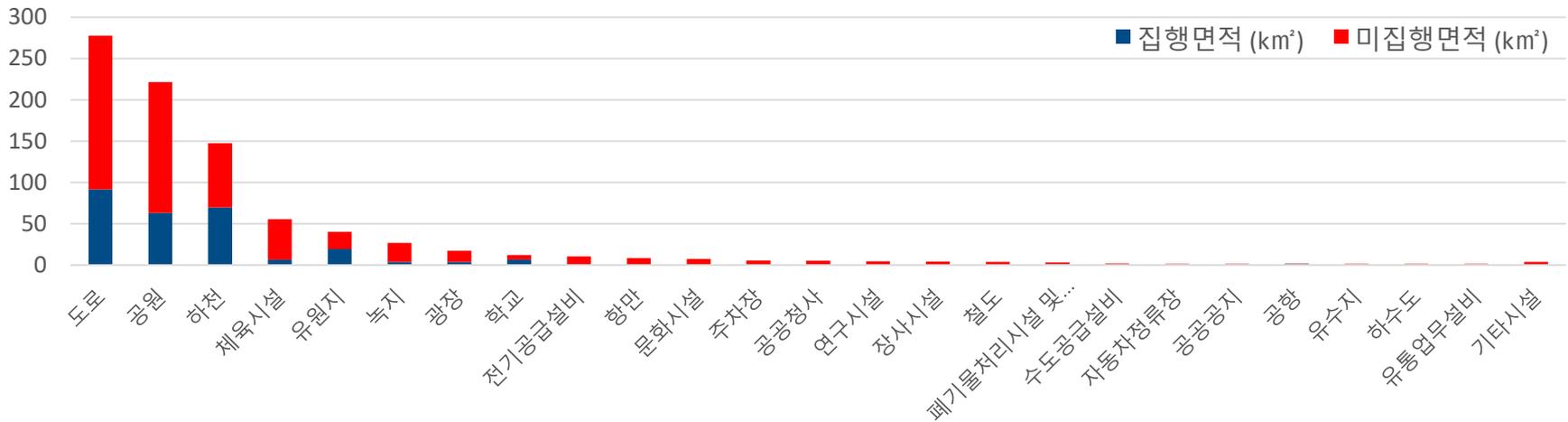


Figure 00. 도시·군계획시설별 집행 및 미집행 현황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2021년

III. 저출산이 국토·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 도시 소멸 위험 - (1) 인구감소지역 전국 89곳 지정 (수도권 4곳)

- 지방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실정임
- '21년 기준,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수 지표(8개)를 활용하여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결과, 총 89곳(시군구 단위)으로 지정됨
- 인구감소지역에 일부 대도시(부산, 대구, 인천, 경기)의 도심지역도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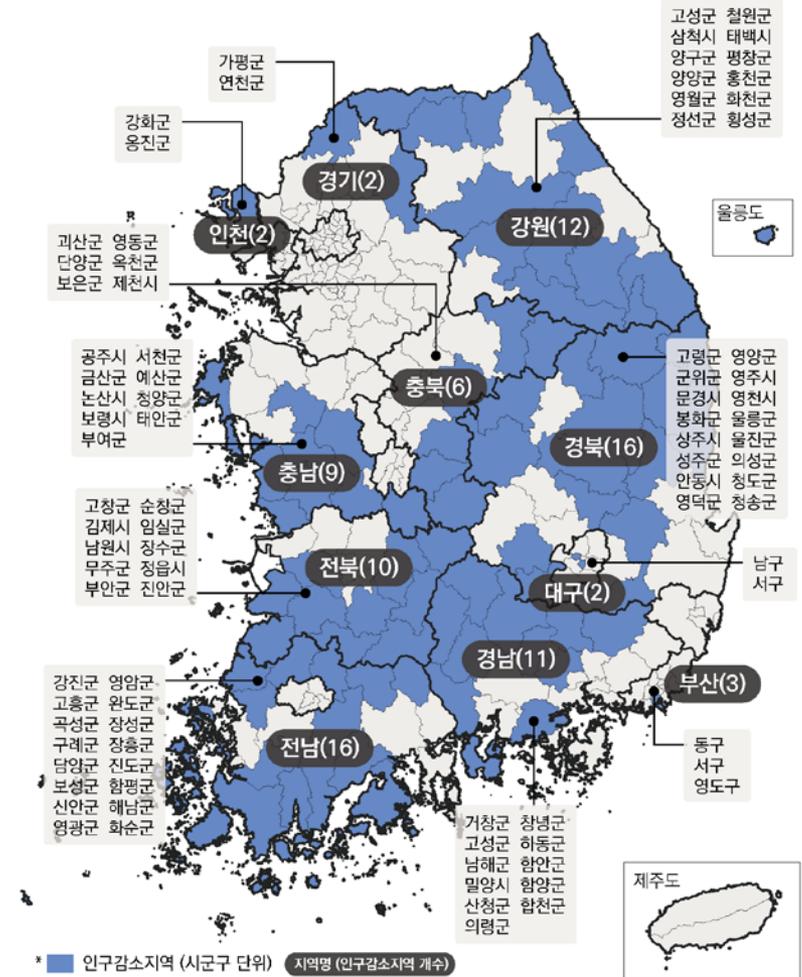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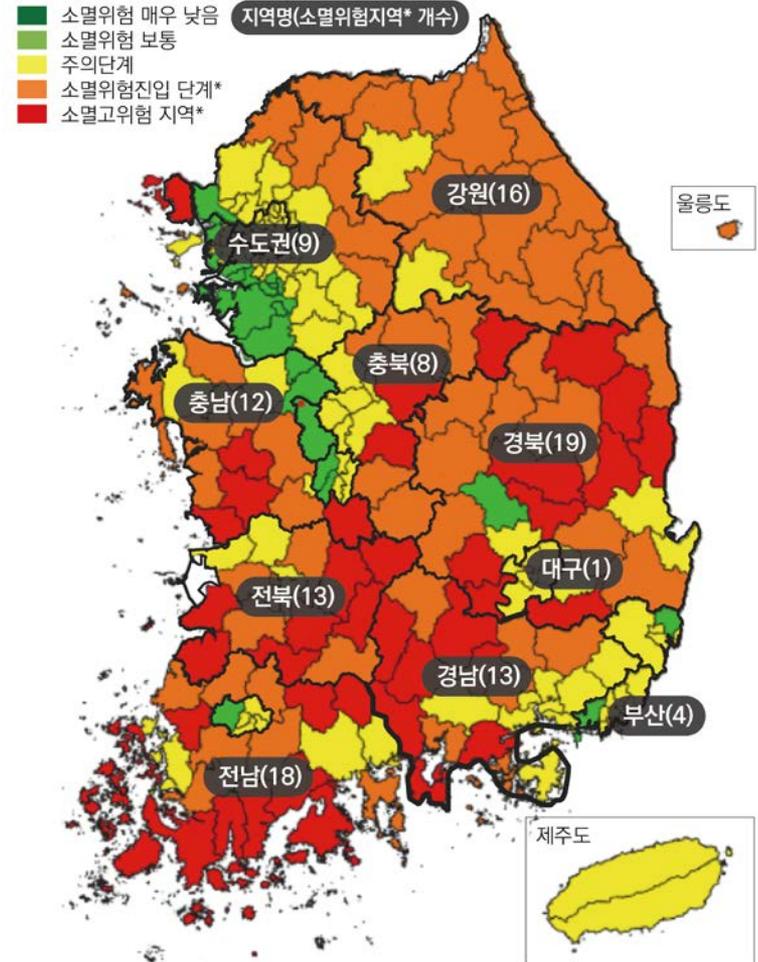


Figure 000. 인구감소지역 (출처: 행정안전부, 저자 가공)

III. 저출산이 국토·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 도시 소멸 위험 - (2) 소멸위험지역 전국 113곳 지정 (수도권 9곳)

- '22년 3월 기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소멸위험지수로 분석한 결과, 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진입 단계, 소멸고위험 지역) 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49.6%) 수준으로 나타남
- 소멸위험지역에서 수도권 지역이 9곳(인천광역시 3곳, 경기도 6곳) 포함되어, 지방중소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이 소멸 위험에 있는 실정임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Figure 000. 소멸위험지역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저자 가공)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 저출산 관련 정책의 필요성
- ▶ 해외사례
- ▶ 국내사례
- ▶ 주거정책
- ▶ 직주근접
- ▶ 보육환경
- ▶ 아동친화도시
- ▶ 여성친화도시
- ▶ 저출산 관련 지표연구
- ▶ 정책의 한계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저출산 관련 정책의 필요성

- 출산율은 각 개인의 출산결정의 합으로, 다양한 미시적, 거시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음
-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정책 모형 제시 필요함
- 저출산 정책은 출산율 증가를 위해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궁극적으로는 양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출산의지를 높이기 위함**(이미옥·명성준,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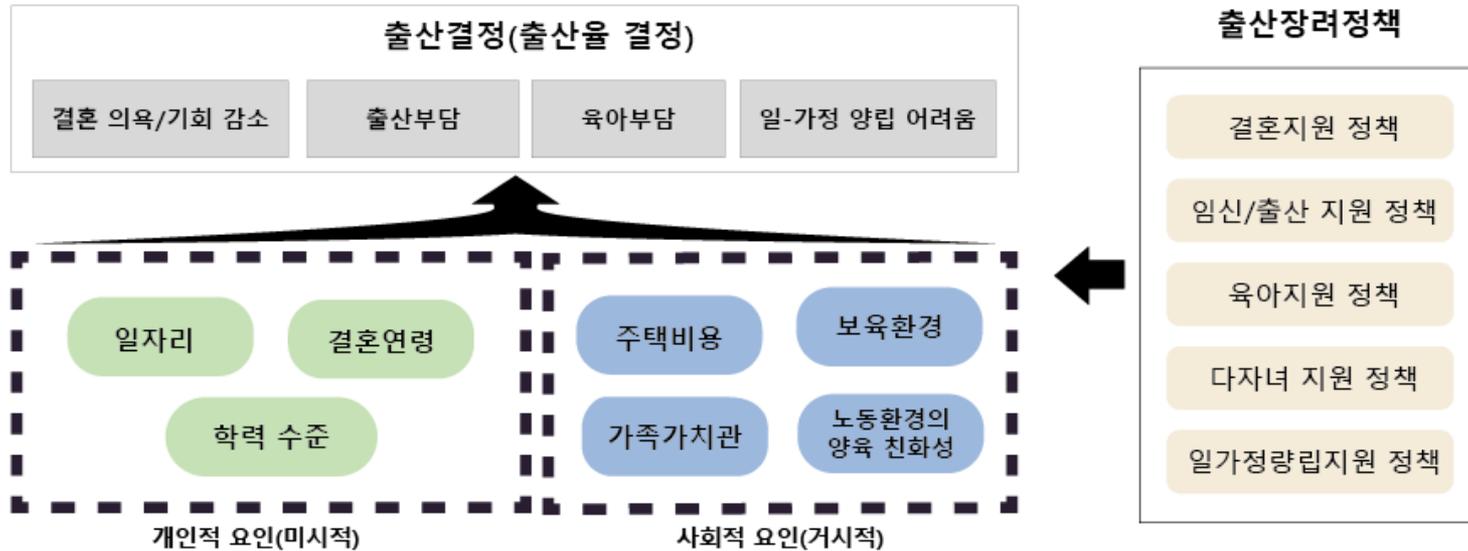


Figure 000. 저출산 원인 및 관련 장려정책 유형
출처: 강영주·금창호(2017, p.44 재가공)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해외 사례 - 프랑스

- 프랑스는 1970년대 초반 이후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였으나, 사회경제적 요인과 함께 주택 및 가족정책과 육아정책을 통해 1995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됨
- 육아정책으로 공립 유아원(3세 미만 아동 보육시설)과 같은 집단 보육시설을 설치. 유치원은 유럽 내에서 수용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주택정책으로는 임대료, 가구 소득 수준, 주택의 유형을 고려하여 주택 수당을 제공, 근무시간정책과 시간관리부서를 통해 직장-보육시설의 이용시간을 충돌을 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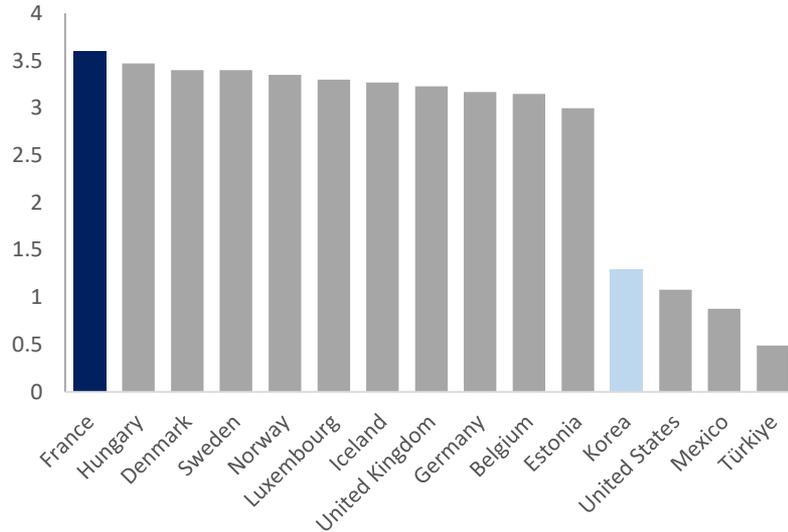


Figure000. OECD 회원국 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중
출처: OECD Statistics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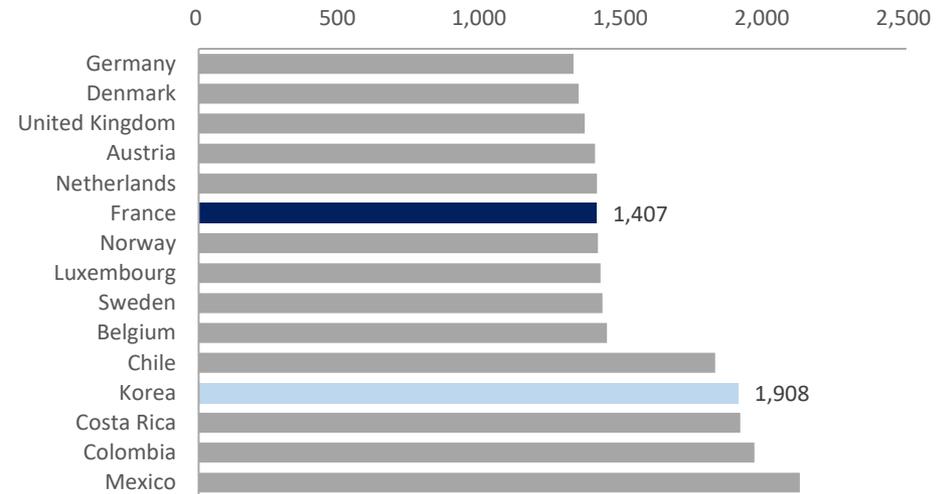


Figure000. OECD 국가별 연평균 근무시간
출처: OECD Statistics (2020)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해외 사례 - 영국

- 아동 보육 프로젝트(SureStart)는 영국의 교육 기술부와 노동연금부의 아동 보육 프로젝트로, 빈곤층 아동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시작
- SureStart 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의 아동센터는 빈곤층의 자녀가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이 설치되고, 지역의 도서관, 병원, 학교 등이 협조하여 함께 프로그램을 제공함



Figure 000. 영국 SureStart 홍보 자료
출처: westart 홈페이지
(<https://westart.or.kr/%EC%98%81%EA%B5%AD>)



Figure 000. Sure Start Whitely 의 부모와 자녀 모습
출처: --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8/apr/05/1000-sure-start-childrens-centres-may-have-shut-since-2010>)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해외 사례 - 스웨덴

- 스웨덴의 출생률은 감소와 증가의 전환이 반복되다가,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10년 이상 출산율이 지속해서 증가 추세
- 스웨덴은 가족정책 혜택의 기본단위를 아동으로 보며, 고용정책과 연관. 공공 보육기관은 부모의 일과 가정이 통합되는 곳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택정책으로 "주택임대료 인상억제법"에 따라 평균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인상하여 주거비용 안정을 통해 여성 출산율을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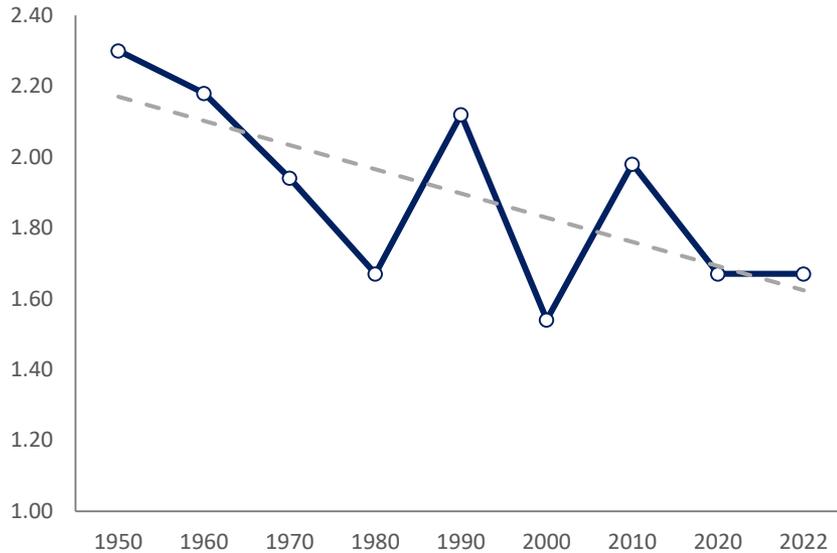


Figure 000. 스웨덴 출산율 추이
출처: 국가통계포털(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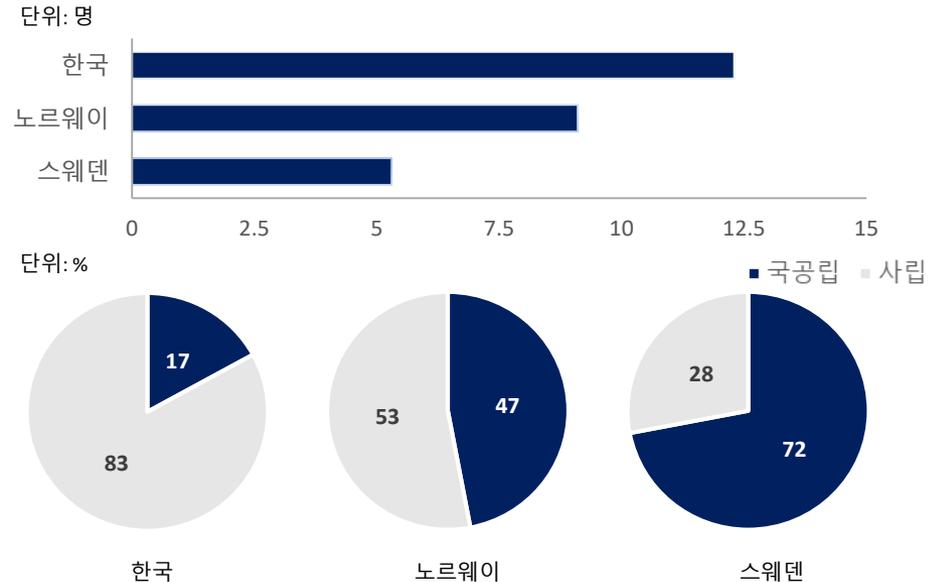


Figure 000. 유치원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국공립·사립 보육시설 비율
출처: 박용하(2019)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해외 사례 - 독일 뮌헨, 하노버

- 독일 뮌헨은 여성 친화도시정책을 펼치는데 앞장섰으며, 도시발전계획 수립 시 설문조사를 통해 성별에 따른 동선 차이, 거주지,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였고 이를 교통 및 도시계획 수립 시 반영
- 2004년 1월 28일 하노버는 2004년 남녀 평등에 대한 내용을 시 행정의 규정과 지역 위원회 규정에 포함함. 또한 여성친화적 지역토지이용계획 목표를 설정하여 가족 친화적인프라 구축, 안전, 생활영역 사이 이동 및 연결이 쉽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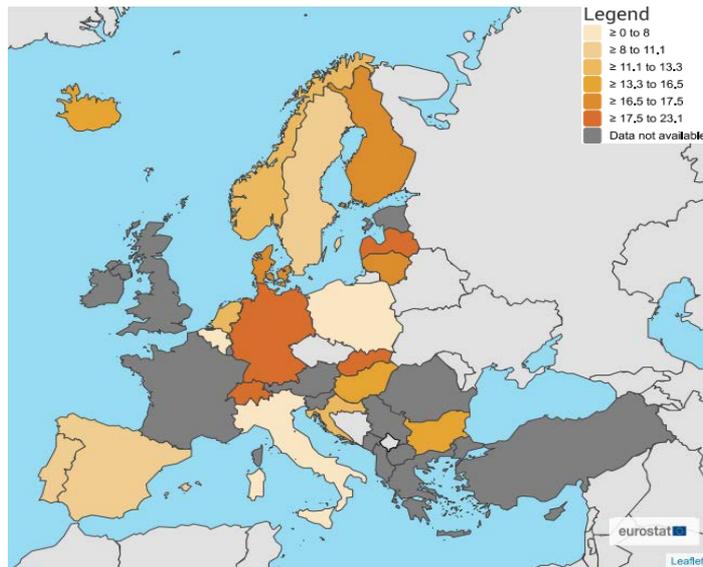


Figure 00. 유럽 내 남녀 임금 격차 출처: Eurostat(2017)



Figure 00. 여성 친화적 지역 토지이용계획의 목표 출처: BVG 홈페이지 (<https://www.bvg.de/en>)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해외 사례 - 오스트리아 비엔나

- 1991년 비엔나에서는 '여성-일-도시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및 여성친화도시에 앞장섬
- 2006년에는 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에서 성주류화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 도입
-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시 '여성의 일상생활과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도록 설계함. 특히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유모차, 자전거 보관소, 세탁실 등의 접근성을 높여 편리하게 조성함



Figure 000. 오스트리아 비엔나 Wome-Work-City
출처: Foran(2013)



Figure 000. Wome-Work-City 내 유치원
출처: Foran(2013)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해외 사례 - 미국

- 미국은 2021년 '미국 가족 계획'으로 3~4세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유치원 무상 교육 정책을 시행
- 미국은 아동에 관한 주택 정책을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안정과 주거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지원(자금, 세제) 복지 프로그램과 부지 정책

Table 11. 미국의 아동관련 저소득층 주거안정(Stability) 정책

구분	내용
주택 보조금 및 임대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보조금 지원 (연간 8,000달러) • 저소득층 가정에게 지속적인 임대료 보조금 지원 • 저소득층 가정은 저렴한주택에 접근할 수 있으며, 아동은 물리적으로 안전한 주택과 동네에 거주할 수 있음
세금 공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자녀 가정은 침실 3개 이상의 넓은 주택이 필요하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시장에서는 이러한 주택이 부족함 • 이에 세금 공제 지원을 집중하여 적합한 규모의 주택을 개발하도록 장려
안정적인 가정유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문제로 부모와 아동이 분리되지 않고,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주거이동 시기 선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이 스스로 주거 이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출처: 정소이 외(2020, p.202)

Table 12. 미국의 아동관련 저소득층 주거안전(Safety) 정책

구분	내용
물리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렴한주택과 주택 바우처를 통해 납 중독, 소음, 훈잡, 상해 등의 위험이 없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동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동네의 기준 빈곤율과 범죄율이 낮고, 좋은 학교 위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 등 •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동네의 긍정적 영향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보행 거리 내 편의시설을 잘 갖춘 지역, 보행이 안전한 동네 등 • 저소득층 가정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동네”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주택 이동 프로그램 추진, 저소득층 가정이 신축 주택 단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 좋은 학교 근처의 저렴한 주택을 보존하고 확대

출처: 정소이 외(2020, p.202)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해외 사례 - 일본

- 일본은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이 전망 되면서 여러 저출산 대응 주택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양육에 적합한 민간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장 35년까지 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증권화지원사업(Flat 35)를 시행
- 마이홈임차 제도를 통해서 고령자들(50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육아세대 등에 임대주택으로 빌려주고 있음
- 육아인증맨션을 통해 육아하기 쉬운 시설, 설비, 서비스 등 육아 친화 거주환경을 조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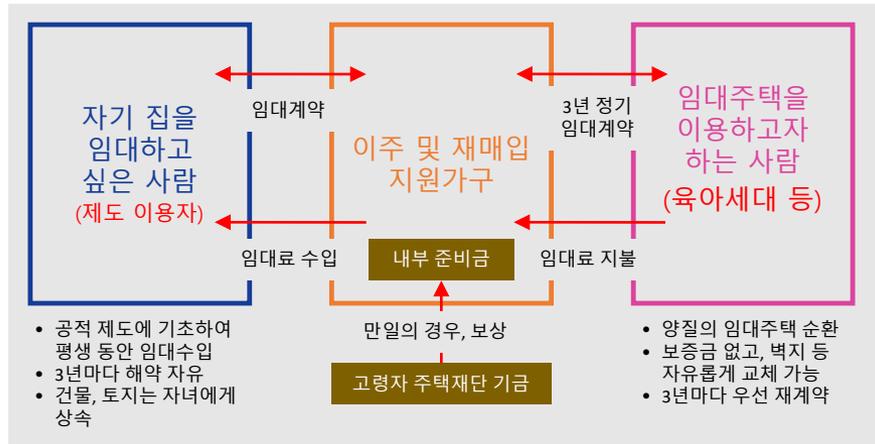


Figure 28. 마이홈임차 프로세스
출처: 후나바시 시청 홈페이지
(<http://www.city.funabashi.lg.jp.k.ce.hp.trans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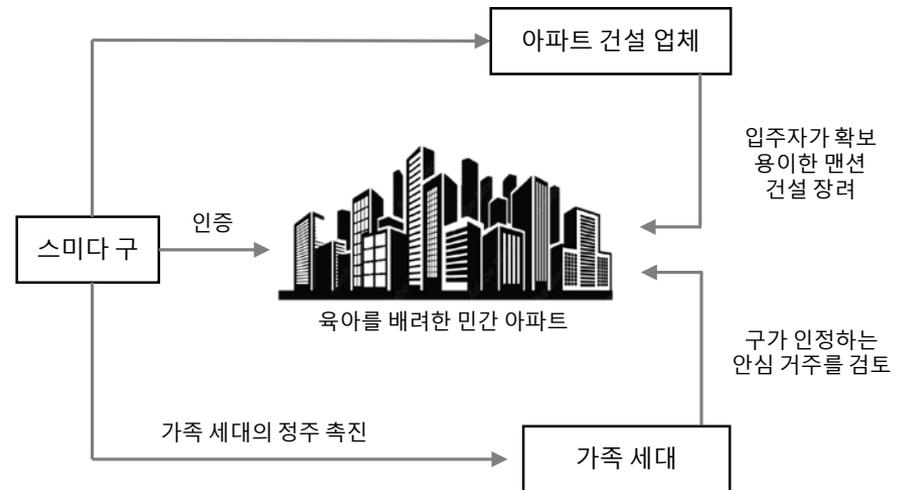


Figure 29. 육아인증맨션 건립을 통한 기대효과
출처: 출처: 천현숙 외(2012. P.15)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해외 사례 - 일본 요코하마

- 요코하마시 지역육아응원아파트와 같이 육아에 친화적인 거주 환경과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지원 시설을 병설한 아파트를 육아인증멘션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
- 미취학아동의 놀이, 육아 상담,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거점 시설에 전임 스태프를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022년 기준 26개 거점시설 존재(서울 면적의 70% 정도 크기)



Figure 30. 고히쿠구 지역 육아지원거점 시설 '드롭프'
출처: 요코하마 시청 홈페이지
(<https://www.city.yokohama.lg.jp/>)



Figure 31. 육아지원거점 시설 '드롭프' 홈페이지
출처: 드롭프 홈페이지
(<https://www.kohoku-drop.jp/>)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해외 사례 -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어려움과 이민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을 시행
- 주택정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신규분양 우선권을 제공하고,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대기 과정에서 가족임시주택제도를 통해 임대 가능. 또한 생애 최초로 주거를 마련하는 부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최대 25년동안 집값의 80-90%를 저리 대출을 지원
- 아동 친화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 버스 정류장과 장애 아동이 접근 가능한 공원 설치



Figure 00. 싱가포르 아동 친화 스마트 시티 버스정류장
출처: Zvobgo(2018)



Figure 00. 싱가포르 포용 놀이터, Canberra Park
출처: Little Day Out Team(2016)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국내사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에 관한 기본법이 아래와 같이 제정됨

구분		주요내용
목적(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화·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저출산대책 (제7조~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정책(제7조)과 인구교육(제7조의2), 자녀의 출산과 보(제8조),모자보건의 증진(제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제10조)
	고령사회정책 (제11조~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과 소득보장(제11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제12조), 생활환경과 안전보장(제13조),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제14조), 평생교육과 정보화(제15조), 취약계층노인등(제16조)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제17조), 경제와 산업 등(제18조), 고령친화적 산업육성(제19조)

Figure 17. 저출산·고령사회 제1차-제3차 기본계획 관련 연혁
출처: 국가법령센터(2022)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국내사례 - 국내 저출산 정책 현황

- 기본법이 제정 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마련 및 시행됨
- 1~3차 기본계획은 인프라 이용, 현실적 사각지대 등 사회구조 인식 변화의 한계가 존재(강영주·금창호, 2017)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전 세대 삶의 질 향상 및 연대 강조하며, 지원 대상 수준이 확대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

2005.0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2006.0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 출산과 양육에 장애 없는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및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 4개 분야 237개 과제

2010.0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5), 저출산 분야/고령사회 분야/성장 동력 분야 -> 3개 분야 231개 과제 추진

2015.1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브릿지 플랜 2020), 기혼가구 중심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

Figure 17. 저출산·고령사회 제1차-제3차 기본계획 관련 연혁
출처: 강영주·금창호(2017, p.32 재가공)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국내사례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추구하며 개인의 삶의 질 뿐 아니라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을 목표로 함(대한민국정부, 2020)
- 영아기 뿐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른 세대별 지원대책을 제안함



Figure 18.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생애주기별 주요 지원대책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내용 재구성)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국내사례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추구하며 개인의 삶의 질 뿐 아니라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을 목표로 함(대한민국정부, 2020)
- 영아기 뿐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른 세대별 지원대책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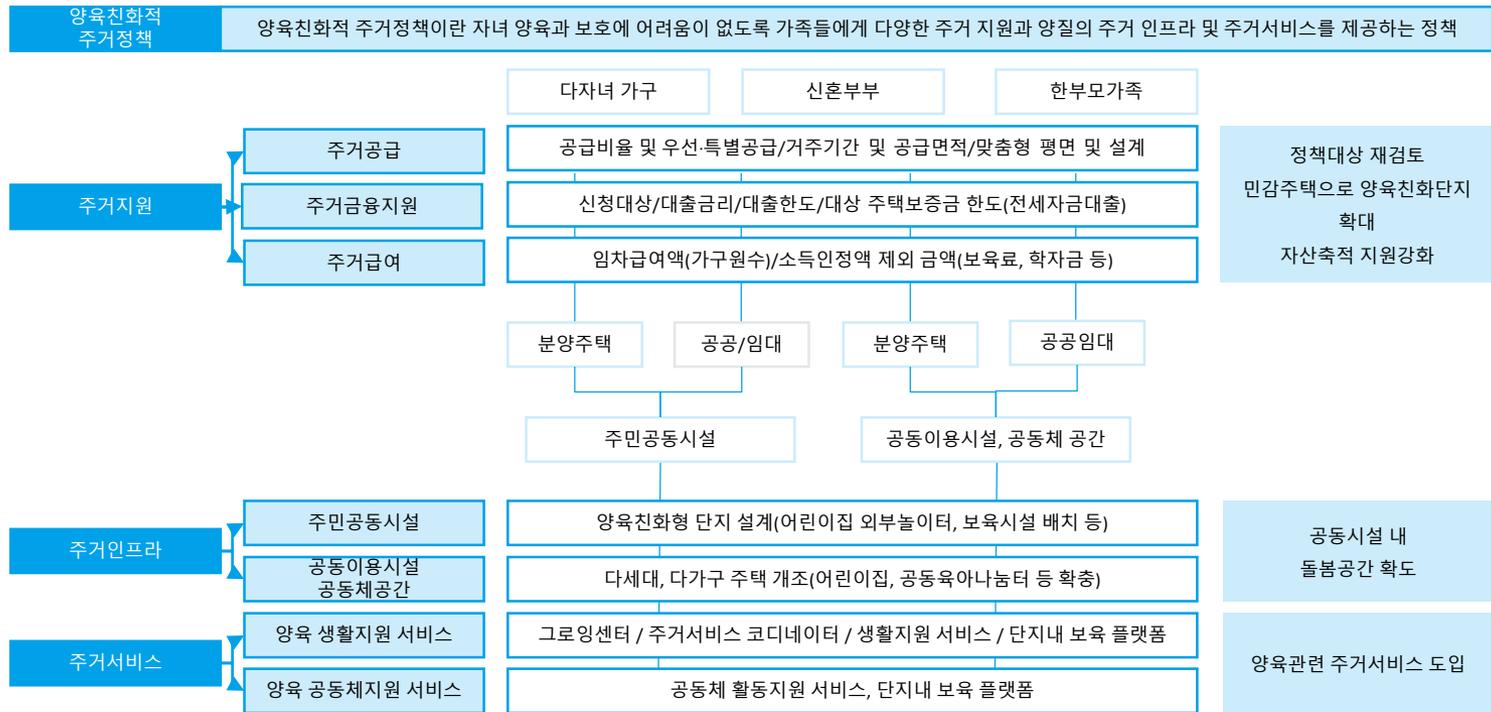


Figure 00.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주요 내용
출처: 김지혜 외(2019, p.8 내용 재구성)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국내사례 - 국내 지역 주도 저출산 위기 극복 사례

-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개념에서 삶의 전반을 향상 위한 사업으로 확장됨(행정안전부, 2021)



Figure 19. 영유아 복합 커뮤니티 시설 아이맘 강동
출처: 김승우(2022)



Figure 20. 농어촌 맞춤형 공공산후조리원
출처: 완도대성병원 홈페이지
(http://www.wandodaesung.co.kr/wp_2ds/05_01.html)

- 제4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1-4>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관련
서울 강동구(아이맘강동), 서초구(구립 키움센터), 경기 시흥시(숨쉬는 놀이터) 등 아이 돌봄 센터 등 지원하여 운영.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놀이문화 확대 등 부가효과 창출
- 제4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1-5>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관련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통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전라남도), 출산 인프라 확보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으로 출산율 확보(강원도 양구군 1.63명)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주거정책 - 주택 정책(주거비 지원) 필요성

- 신혼부부통계 결과 보도자료에 의하면, 자녀가 있는 초혼 부부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1.3% 하락**했으며 평균 자녀 수는 전년보다 0.02명 하락한 0.66명(통계청, 2021)
- 신혼부부의 출산율과 관련하여 양육을 위한 주거 정책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며, **기혼여성 97.1%가 국가의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필요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야한다고 응답**

Table 3.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여건(1순위)

구분	전체	지역			응답기준 아동연령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소득향상 및 고용 안정	22.4	19.8	25.8	19.8	23.6	20.3	22.3	23.4
주택가격 안정	21.1	24	17.7	22.9	24.7	26.1	15.9	17.9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10.5	9.7	10.0	14	11.8	9.5	10.2	10.6
자녀 양육 비용 부담 해소	9.9	9.3	9.3	12.9	11.8	9.4	11.1	7.3
양육관련 주거서비스 제공	9.8	10.4	9.3	9.4	7.2	13.4	9.9	8.7
주거안정성 확보	8.2	8.2	8.7	7.0	7.2	5.5	11.3	8.7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6.9	8.2	6.5	4.6	2.7	4.7	6.8	13.2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5	4.9	5.6	3.5	6.1	4.7	6.8	2.3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	2.5	2.5	3.3	0.6	2.3	2.7	1.9	3.3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2.4	1.4	2.7	4.1	1.9	1.9	2.3	3.5
양성평등 구현	1.1	1.4	0.9	1.2	0.8	1.2	1.5	1.1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0.1	0.0	0.2	0.0	0.0	0.4	0.0	0.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김지혜 외(2020, p.77)

Table 4.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필요성에 대한 기혼 여성 의견

구분	비중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38.8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	58.3
별로 지원할 필요 없다	2.2
전혀 지원할 필요 없다	0.4
모르겠음	0.4
계	100.0

출처: 김지혜 외(2020, p.76)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주거정책 - 주택 정책(주거비 지원) 필요성

- 전국 시군구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평균지가, 조출생률, 가구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 단독주택비율이 높아질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천현숙 외, 2013)
- 주택의 점유 형태의 경우 자가, 전세 등 순으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남(이삼식 외, 2014; 김경아, 2017; 이상포, 2017)

Table 5. 전국 시군구 합계출산율 관련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합계출산율(%)	2005년	2010년
자가율(%)	0.40**	0.47**
조출생률(%)	0.38**	0.41**
가구당 주거면적(m ²)	0.33**	0.26**
1인당 주거면적(m ²)	0.31**	0.34**
주거지역 평균지가(원/m ²)	-0.54**	-0.49**
단독주택(%)	0.33**	0.38**
아파트 비율(%)	-0.22**	-0.27**

출처: 천현숙 외(2012, p.42)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주거정책 - 국내 주거비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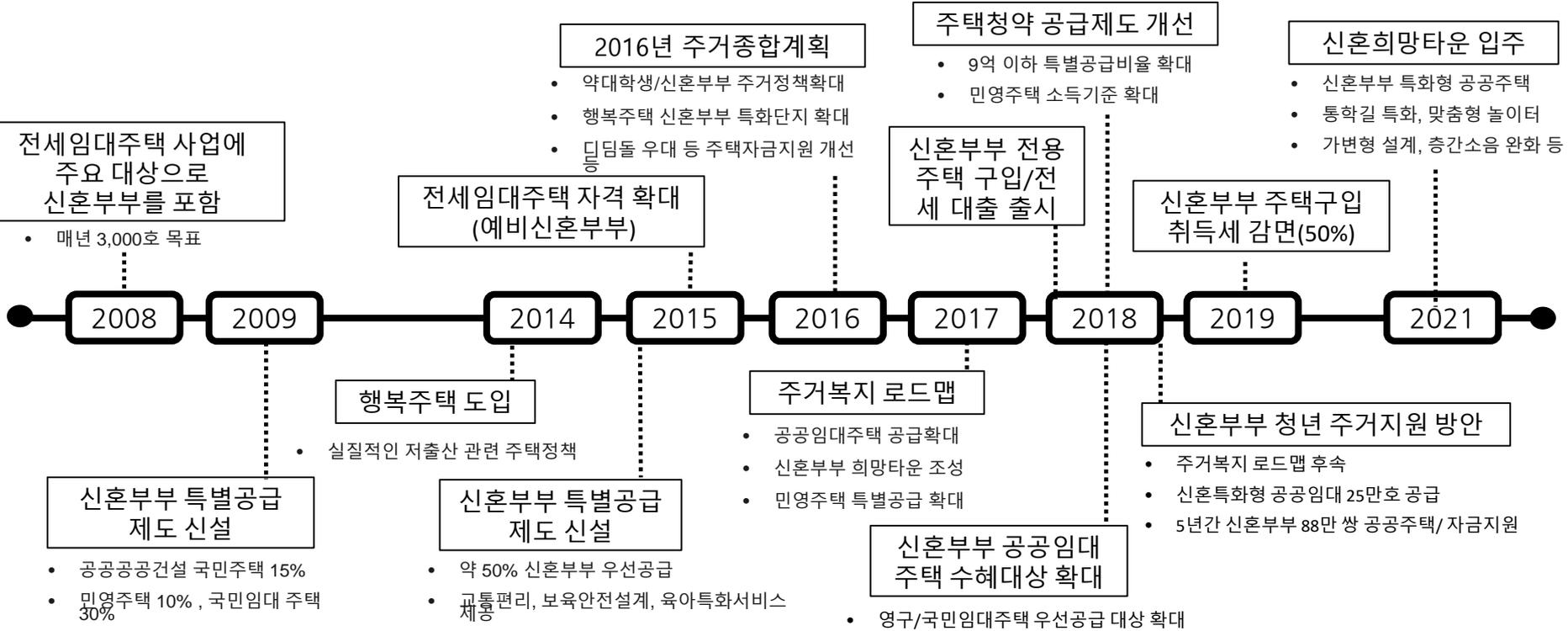


Figure 23.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

출처: 정소이·박서경(2019, p.65)

-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장기전세, 저금리 대출, 전세자금 지원 등
- 2016년 주거종합계획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 확대 추진
-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 2018년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으로 주거지원 강화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직주근접 -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도시

- 육아친화 환경 조성은 육아 부담을 줄이며, 젊은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이와 관련하여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방안을 제시됨(강은진, 2020)
- 지역의 안전성, 편의성, 서비스 접근성, 직주 근접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되며,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와 제반, 물리적 환경을 갖추도록 융·복합적 도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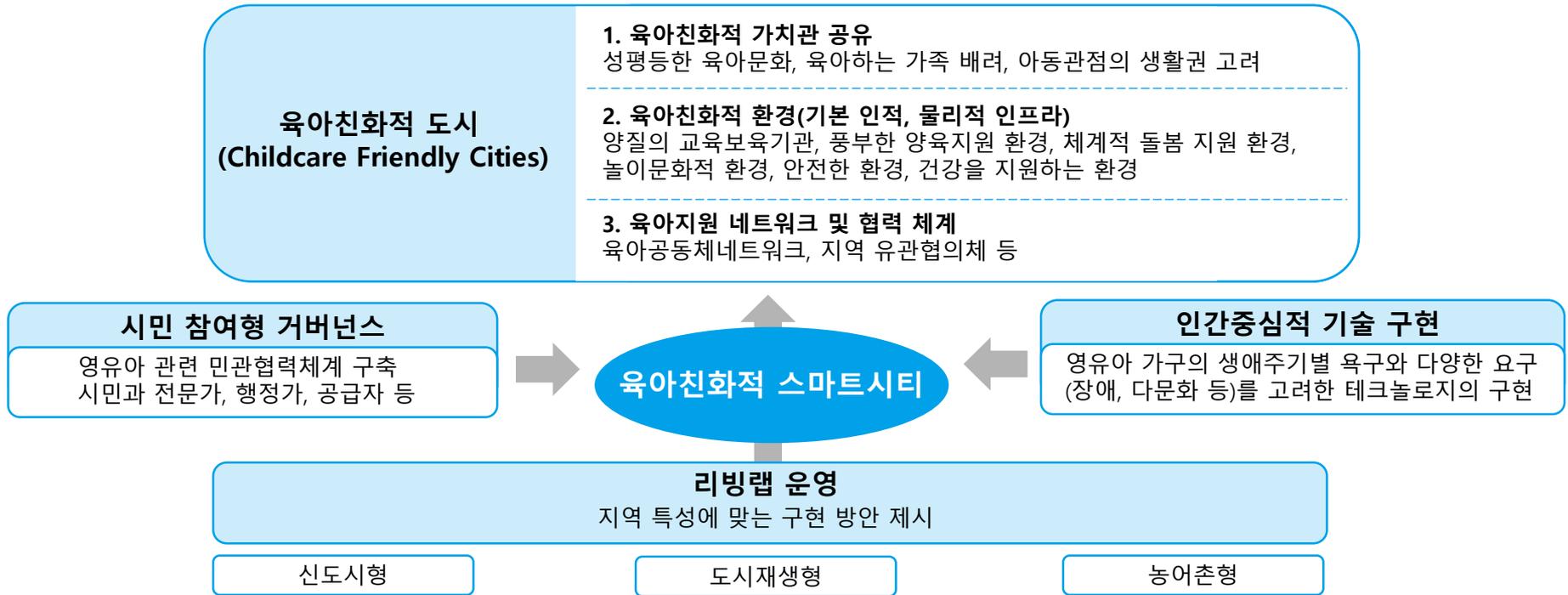


Figure 23.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의 기본 요건과 추구방향
출처: 강은진 외(2020, p.105)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직주근접 -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도시

- 육아친화적 스마트 시티 조성과 관련하여 리빙랩 시범 운영 지역으로는 “시흥시 배곧지구”가 있음. 경기도 시흥시는 배곧지구를 대상으로 육아친화환경 사전진단을 실시
- 배곧지구는 시흥시 내 기성시가지 대비 육아·돌봄 지원 서비스, 문화 인프라, 안전관리 등의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설문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적용가능한 스마트 기술이 발굴됨

Table 00. 배곧지구 문제에 적용가능한 스마트 기술

배곧지구 이동안전 문제	적용가능한 스마트 기술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교차로 대응형 스마트 횡단보도 · 횡단보도 안전지원 시스템 + 말하는 교차로 알리미 ·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 + 긴급출동지원서비스
주차 밀집지역 불법 주차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양심 주차 유도장치 · 말하는 교차로 알리미 · 불법주차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초등학생 알리미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지킴이 서비스 · 가디언 스마트안심서비스
아파트 단지 내 안전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 말하는 스마트폰 연동형 차량접근 알리미

출처: 강은진(2020, p.15)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보육환경 - 현황

- 대한민국의 영아 시설 이용률은 OECD 평균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최초 이용 월령의 경우 2009년 평균 30개월에서 2021년 21.8개월로 빨라지고 있음(보건복지부, 2022a)
- 반면 어린이집 추이는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매년 약 1.8개씩 감소해 2021년 기준 정원충족률은 76.1%. 주로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이 폐원되며, 국공립 혹은 직장 어린이집은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성과로 여겨짐(보건복지부, 202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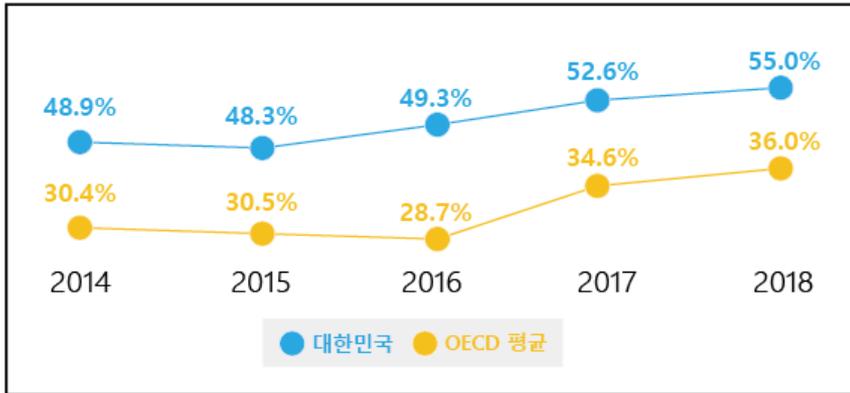


Figure 26. 대한민국과 OECD 국의 영아 시설 이용률
출처: 보건복지부(2022, p.7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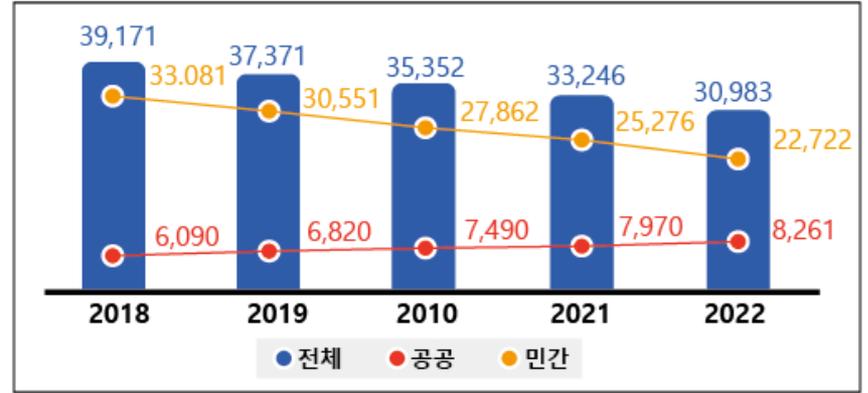


Figure 26. 대한민국 어린이 집 수 추이
출처: 보건복지부(2022, p.7 재구성)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보육환경 -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2~2027)

- 기존 보육 기본계획의 한계로 불충분한 생애 초기 지원, 품질 미흡, 전문 교직원 및 근무환경 개선 부족, 인구 감소에 따른 서비스 사각지대 존재 등이 논의됨
- '성장 시기별 최적 지원 강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격차 없는 출발선' 등을 목표로 한 기본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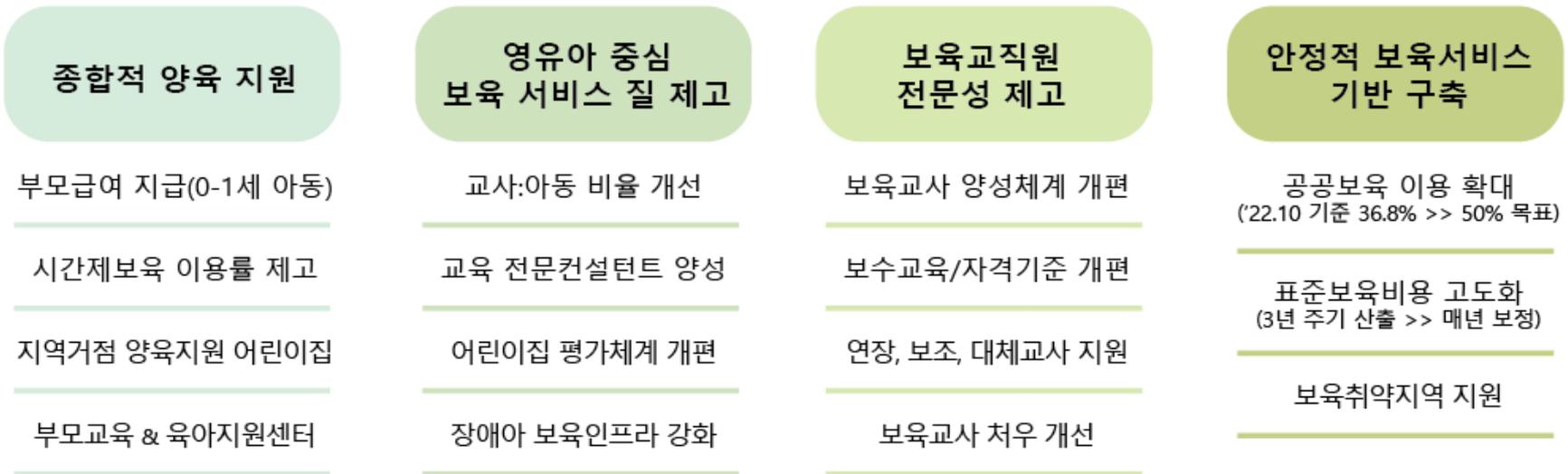


Figure 26.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주요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2022, 재구성)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보육환경 - 형평성 분석

-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해 도시 공간에서 실제 교통, 통행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다양한 시설에 대해 접근성을 산출할 수 있음
- 이는 미시 단위로 하여 건물 요소를 추가해 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 영유아 거주건물 수에 따른 보다 정확한 형평성 고려가 가능(전수광 외, 2022)
- Reach Index(반경 내 도달가능한 시설 수), Gravity Index(시설 도달을 위한 공간적 저항 정도) 등을 참고해 보육환경 시설 확충 등에 활용 가능(정상희 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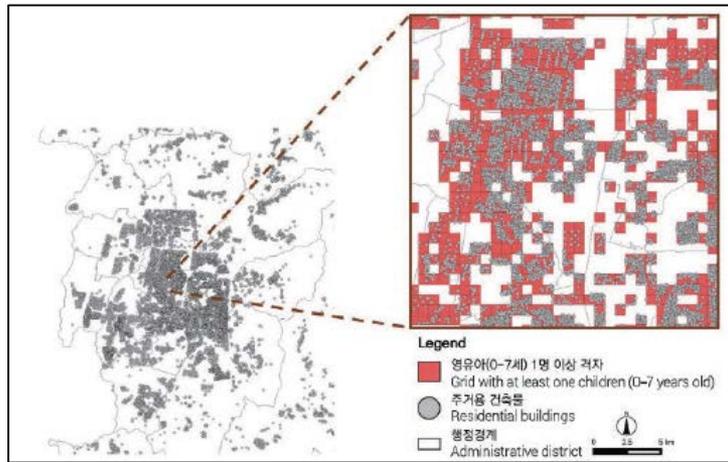


Figure 32. 영유아 거주건물 활용한 분석자료 예시
출처: 전수광 외(2022,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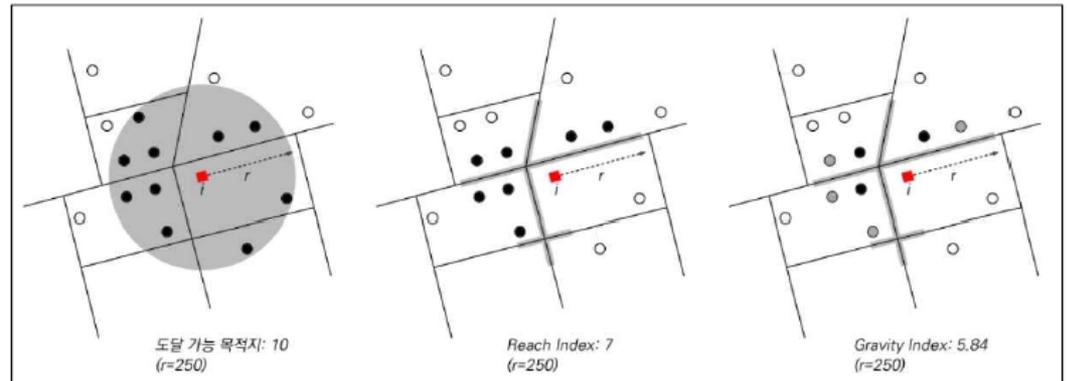


Figure 32. 시설 접근 형평성 평가 지표
출처: 정상희 외(2022, p.6)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보육환경 - 시설 형평성

- 서울시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일부 행정동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놀이시설의 우선공급이 고려되어야함(정상희 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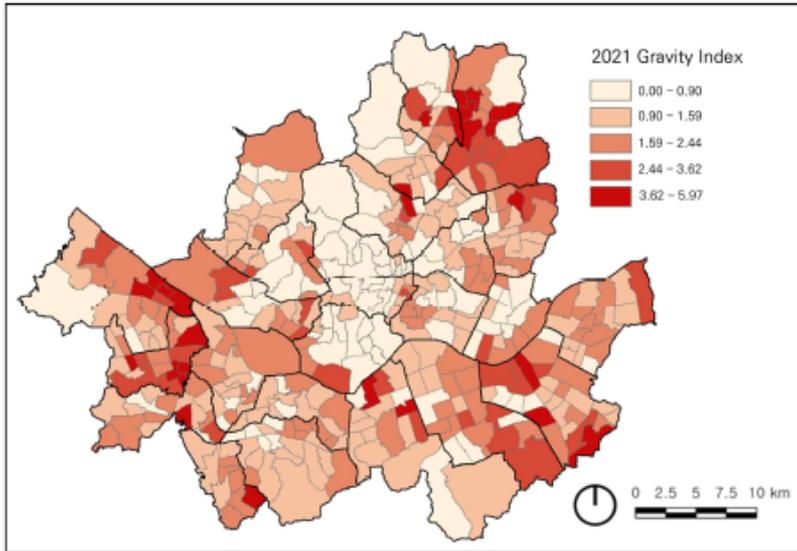


Figure 32. Gravity Index 구간 별 통계

Gravity Index	15세 미만 인구		주거시설		행정동		
	수(명)	비율(%)	수(호)	비율(%)	수(개)	비율(%)	
G1	0.00~0.90	163,595	16.16	605,984	20.10	108	25.41
G2	0.90~1.59	329,231	32.52	1,046,393	34.70	150	35.29
G3	1.59~2.44	288,816	28.53	786,171	26.07	102	24.00
G4	2.44~3.62	136,841	13.52	347,330	11.52	39	9.18
G5	3.62~5.97	93,808	9.27	229,453	7.61	26	6.12
합계		1,012,291	100	3,015,331	100	425	100

출처: 정상희 외(2022, p.8)

Figure 32. 서울시 행정동별 어린이 놀이시설 Gravity Index
출처: 정상희 외(2022, p.8)

- 이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영유아 접근성, 즉 통원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촌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여 형평성 있는 확충의 필요성을 시사함(전수광 외, 2022)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아동친화도시 - 아동친화도시의 배경 및 목적

- 아동의 권리와 참여를 중심으로 도시내 다양한 정책의 초점을 아동에게 두는 것과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
- 아동에게 친화적인 주거환경은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Bujard and Scheller, 2016)
- 도시근린의 안전, 저밀 도시환경 등의 공간구조가 필요하며,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야외 놀이공간은 필수적임 (신정엽,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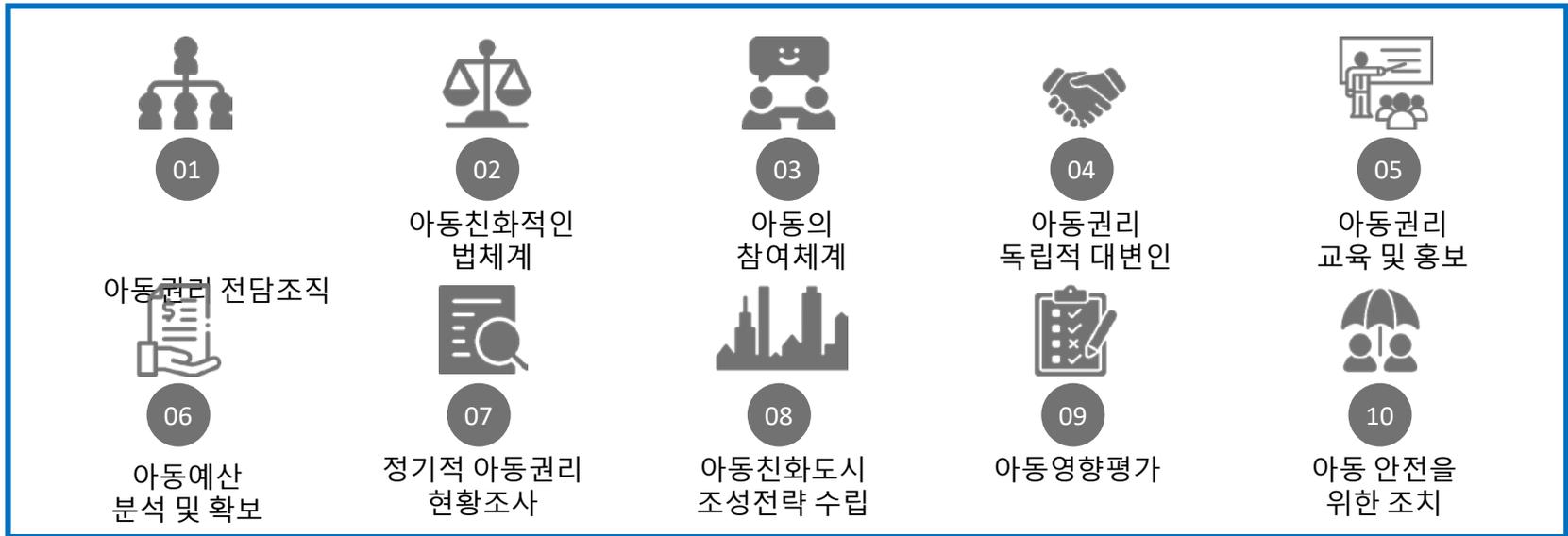


Figure 32.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

출처: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2021)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아동친화도시 - 해외 조성 사례

- 독일은 아동의 삶의 질을 위해 1972년 비영리 독일 아동 후원 기관을 설립함
- 이 기관은 시소, 그네, 모래사장으로 정형화된 놀이문화 대신 어린이가 스스로 새로운 놀이를 개발할 수 있는 놀이터 조성에 중점을 둠



Figure 33. 독일 아동친화도시 사례
출처: Retrieved from <http://omn.kr/30h8>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아동친화도시 - 국내 조성 사례

- 서울시 성북구가 국내 최초로, 2013년 11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도입. 동별 아동복지플래너 배정, 수요 대응 서비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아동영향평가 제도화 등 진행
- 현재 81개 인증도시가 존재하며, 35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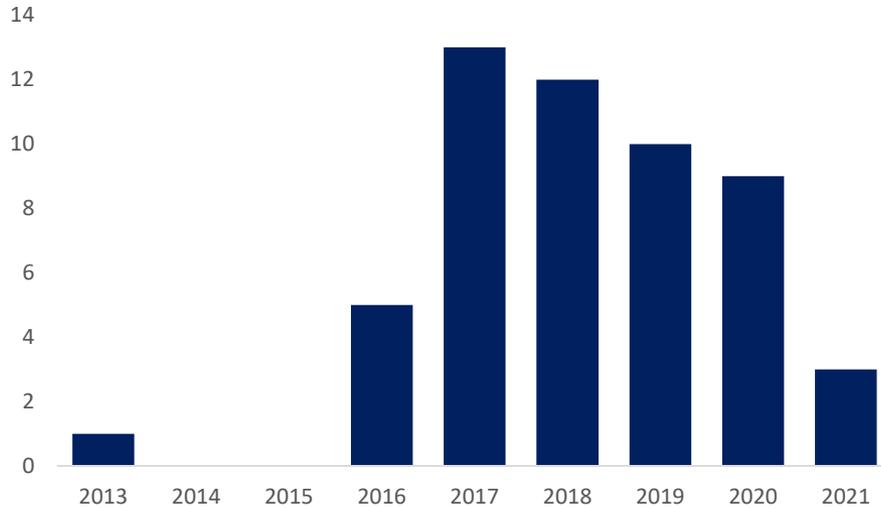


Figure 00. 아동 친화도시 인증현황
출처: 박진희(2020, p130)



Figure 00. 국내 아동친화도시 분포
출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웹사이트
(<http://childfriendlycities.kr>)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아동친화도시 -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

- 아동친화도시인증을 받은 지자체가 증가한 2017년 기점으로 공공시설 수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청소년활동시설, 놀이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아짐(박진희, 2021)
- 아동 놀이를 위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할 때, '아동'의 행복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국내 사례로는 수원시 '우리가 꿈꾸는 놀이터', 안산시 '공동체 숲',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가 있음(조숙인·이민경, 2017)



Figure 00.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출처: 하태민(2016), 박신흥(2018)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여성친화도시

- 여성친화도시는 2010년 구성 매뉴얼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전국 95개 지자체에 조성됨
-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을 보장하여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을 말함



Figure00.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출처: 유희정 외(2010, p.3 재구성)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여성친화도시

-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역 거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자녀를 둔 부모가 직장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지역환경 및 인프라 구축이 중요함 (김학실, 2011; 조명희·공미혜, 2014)
- 2018년 기준 전국 87개의 여성친화도시가 조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경기 안산시, 민간 조직 협력), 마을단위 사회안전망 구축(경남 창원시), 주민 공동체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부산시 덕포동)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이 시행



Figure00. 부산 희망 디딤돌 마을 벽화 중 일부 모습
출처: 송지연(2013)



Figure00.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모습
출처: 채윤정(2019)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초저출산지역 유형화

- 초저출산율 진입값(합계출산율 1.3)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 이를 통해 유형별 출산여건 개선방안 도출을 도모(강영주·금창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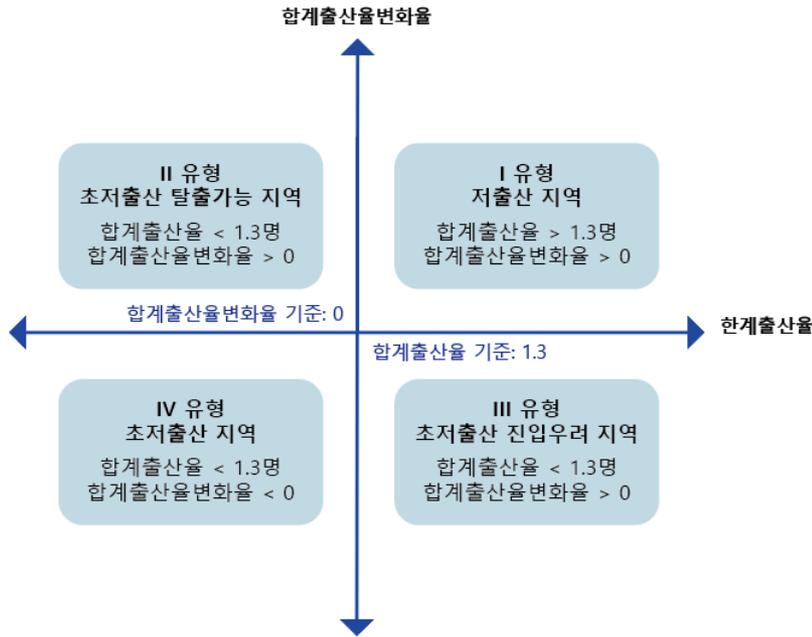


Figure 00. 지역 유형 구분기준
출처: 강영주·금창호(2017, p.105)

구분	요인(지표)	I 유형 평균	II 유형 평균	III 유형 평균	IV 유형 평균	전 유형 평균
인구구조적 특성	가임여성 수	41,888	81,238	31,201	77,221	56,678
	초혼연령	29.15	29.85	29.09	29.88	29.46
경제적 요인	지역총생산	4,284,181	4,880,524	3,369,080	6,605,837	4,753,332
	월평균 주거비	29	45	27	54	38
사회문화적 요인 (가임여성 10만 명당)	보육시설총계	161.49	233.31	132.85	217.44	184.52
	국공립어린이집	6.82	12.76	6.33	16.49	10.29

(단위: 명, 세, 만원, 개소)

Figure 00. 4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출처: 강영주·금창호(2017, p.142)

- 초저출산지역인 4유형의 경우 초혼 연령 평균이 전체 평균보다 높으며, 지역 내 경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주거비도 높아 이이 영향력이 지역 전체의 출산율을 낮춘 것으로 판단됨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출산이행단계지표

- 전국 시군구의 청년 여성비율, 기혼 여성비율, 출산 여성비율, 다자녀 출산여성비율을 활용하여 출산이행단계지표를 계산하면, 인구학적 관점에서 지역유형화가 가능함(조해송·김충호, 2022)

지표명	지표값
청년 여성 비율	20~44세 여성 수 / 총 인구 수
기혼 여성 비율	기혼 여성 수 / 청년 여성 수
출산 여성 비율	출산 여성 수 / 기혼 여성 수
다자녀 출산 여성 비율	다자녀 출산 여성 수 / 출산 여성 수

Figure 00. 출산이행단계지표
출처: 조해송·김충호(2022, p.4)

출산이행단계지표에 따른 지역유형화

유형 1	정년여성의 비율이 높지만, 기혼출산 및 다자녀출산 비율은 가장 낮음 (합계출산율·조출생률 최저, 총인구수 최고)
유형 2	유형1과 비슷하나 유형1보다 정년여성의 비율은 낮고 기혼출산 및 다자녀출산 비율은 높음
유형 3	청년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고 기혼, 출산, 다자녀출산 비율도 비교적 높음 (조출생률 최고)
유형 4	청년여성의 비율은 낮지만 기혼, 출산, 다자녀 출산 비율이 가장 높음 (합계출산율 최고)
유형 5	청년여성의 비율이 낮으나 기혼, 출산, 다자녀출산 비율은 비교적 높음 (조출생률 최저)

Figure 00. 출산이행단계 지표에 따른 지역유형 별 특징
출처: 조해송·김충호(2022, p.7)

- 지역마다 유형 변화 양상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결혼, 출산, 다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유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런 현상이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남

IV.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 정책의 한계

- 기존 정책은 인구성장시대에 맞추어 효율성을 강조하였으며, 인프라만을 위주로 한 사업은 삶의 질 향상을 균형적으로 이루지 못함. 또한 출산 및 양육지원에만 한정된 경우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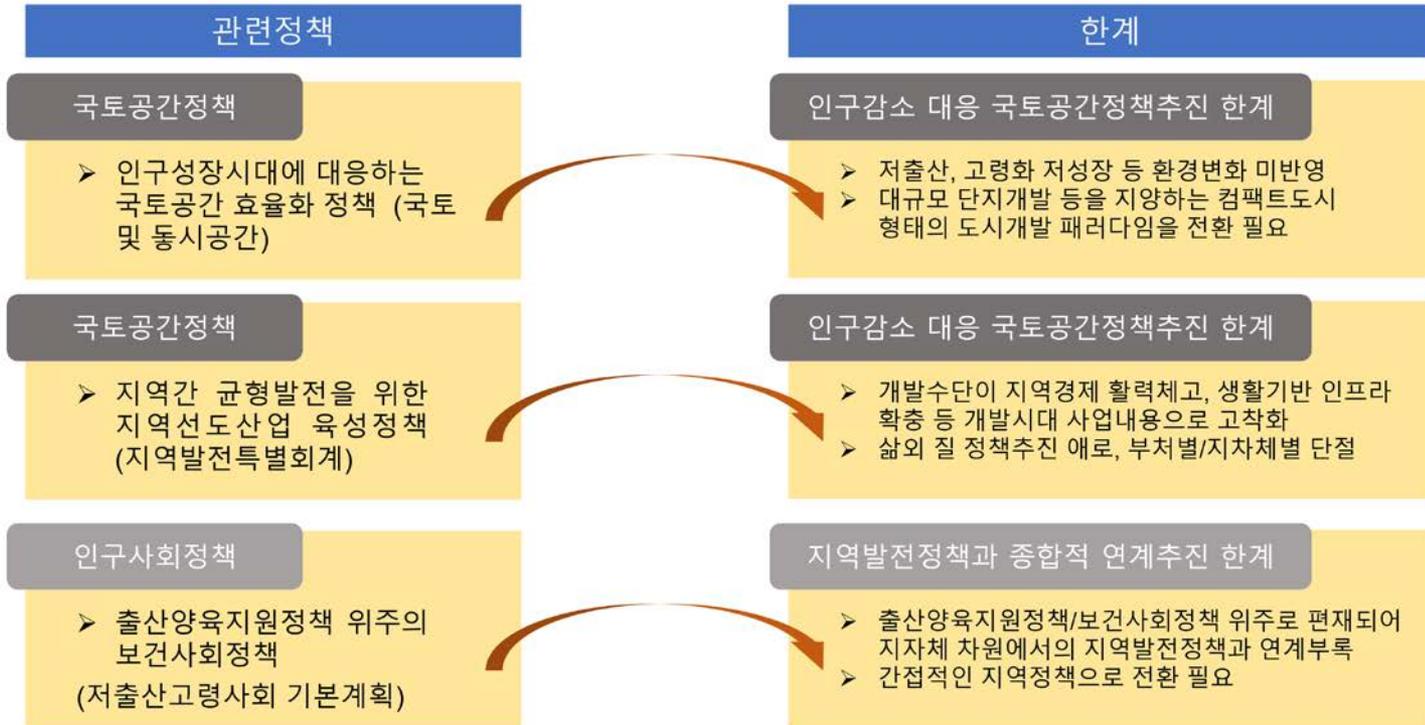


Figure 00. 인구감소시대 관련정책의 한계
출처: 박진경·김선기(2017, p.75 재가공)

▶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 심각화

- 출산합계율은 OECD 최저치인 0.81명으로 추정되며, 인구성장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진입
- 고령인구 비율은 17.5%로 향후 생산연령인구는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주요 시사점

- 고용 불안정과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청년들의 및 출산 기피 경향
- 불충분한 육아 보육 서비스로 인해 일과 가정 양립 곤란
-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과 인프라의 부족으로 불안감 증대
- 저성장시대를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도시개발로 도시기능 저밀화
-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중소도시소멸

대응 방향

- 주거비 지원 정책을 통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안정화 필요
- 주거와 직장, 보육시설의 근접화 및 통합을 통한 육아 친화환경 조성
- 여성 및 아동에게 친화적인 방향으로 도시 물리적 환경 개선
- 다양한 지표 및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공간적 형편성을 효율적인 측정을 위한 연구 필요

- 보건복지부. (2022a). “2021년 보육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b).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 [2023~2027]”, 보건복지부
- 강은진, 박진아, 조혜주, 황명화, 김우창, 문일철, 김예슬. (2020). 육아친화 중점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리빙랩 (living lab) 운영 방안 연구.
- 강은진. (2020).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방안.
- 전수광, 성태경, & 이수기. (2022).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국공립어린이집 공간적 형평성 분석: 충청남도 천안시를 대상으로. *국토계획*, 57(4), 117-129
- 정상희, 한재원, & 이수기. (2022). 서울시 어린이 놀이시설의 공급특성과 공간적 형평성 분석. *국토계획*, 1-15
- 김경수·허가형·김윤수·김상미. (2018).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김우림. (2021).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박선권.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저출산 대응을 중심으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박용숙. (2017).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52: 299-348.
- 송유미·이제상. (2011).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1): 27-61.
- 이지은·임윤숙·김수희. (2019). “맞벌이가정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전국사회복지연구」, 13: 51-67.
- 최영미·박윤환. (2019).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시민인문학」, 36: 101-137.
- 최은영. (2022). 「새 정부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진일보를 기대하며」,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 (2019). 「저출산 대응 주거 지원, 신혼부부에서 육아가구로 확장해야...」,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강지수 외. (2022.12.29) “9세 목숨 앓아간 '무늬만 스쿨존', 서울에 26곳 더 있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2807100001802>
- 홍인기. (2020.08.24) “통계로 본 대한민국 유아교육 현황”, *한국유아교육신문*, <http://www.kinde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513>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3-09-16/how-to-design-a-city-for-women>
- 이상호 · 이상현. (2010).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강은진. (2017).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구축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사례 및 시사점」.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강영주·금창호. (2017),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유형 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 강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강영주·최지민. (2018), 「저출산 정책 개선방안에 관 한 연구: 정책 설계 및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강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공미진·김홍규. (2021). “아동 친화적 도시를 위한 물리적 환경요인의 중요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2(4), 69-79.
- 김경아. (2017). 결혼 여성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문화와 융합, 39, 895-924.
- 김상조·신서경·정유선, (2021).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공간 관리방안”, 「국토정책Brief」, 842.
- 김승권. (2003). 저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2003(12), 6-21.
- 김용수. (2017).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아동권리와 행복감에 관한 연구: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교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2), 485-491.
- 김은영. (2005). 「독일의 저출산과 지속가능한 가족정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지혜·이길제·이재춘. (2020). “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 「국토정책Brief」, 1-6.
- 김진범·박경현 ·장은교 ·박은관, (2010). 「인구감소에 대응한 바람직한 도시정책 방향」, 세종: 국토연구원, 2010-28.
- 대한민국정부.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 박진경, & 김선기. (2017),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진희. (2021).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공공시설 조성 경향 연구”.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6(7), 127-139.
- 박현선. (2020). “놀이친화적 환경이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놀이공간 조성과 지역 유형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69(2), 175-201.
- 송유미·이제상. (2011).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1), 27-61.
- 이미숙. (2022.07.31). 이슈 픽 쌤과 함께, 도시공학자 정석 교수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탈수도권'. 한국강사신문
- 이미옥·명성준. (2015),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331-351.

- 이삼식. (2006). 저출산 원인구조와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2006(1), 5-17.
- 이삼식. (2016). 제 3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전략과 조건: 저출산대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6(2), 6-17.
- 이삼식·신인철·조남훈·김희경·정윤선·최은영·이인재. (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이지혜. (2014).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포·노정현. (2017). “주거환경이 신혼부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35, 273-289.
- 이상호·이상헌. (2010).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이선주·김성길. (2020). 「독일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특징과 한국에의 시사점」. 세종: 국토연구원, 15-30.
- 김예성·하혜영. (2020).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9).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 세종: 국토교통부.
- 자치행정과. (2021). 지역 주도 저출산 위기 극복 우수사례 11건 선정. 11월 3일. 행정안전부
- 정소이·박서경. (2019). 저출산 대응 주거지원의 방향 “신혼 육아세대의 수요 특성을 중심으로. 세종: 국토연구원.
- 조해송·김충호(2022), “출산이행단계지표에 따른 지역유형화와 특성 및 변화양상 분석”.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22 추계학술대회」, p.1-12
- 정경숙·이연숙. (2009). “아동친화적 주거커뮤니티를 위한 공간환경 디자인지침 추출 연구: 아동환경 관련 문헌의 분석을 통해”. 「디자인융복합연구」, 75-88.
- 조명희·공미혜. (2014). “여성친화도시 사례분석: 안전도시, 지역공동체활성화”. 「여성연구논집」, 25, 19-47
- 최영미·박윤환. (2019).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시민인문학」, (36), 101-137.
- 천현숙·오민준. (2014). “출산과 도시주거환경의 연관성과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489), 1-6.

- 천현숙, 김영표, 정희남, 김혜승, 하수정, 김진범, 윤윤정, 오민준, 김태환. (2012).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 (I)」. 세종: 국토연구원.
- 천현숙·정희남·김혜승·하수정·오민준. (2013).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연구 (II)-총괄보고서. 국토연구원 연구정책세미나, 1-222.
- 최봉문. (2021).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현황분석 및 도시공간관리 제도 개선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114-115.
- 홍승아·김혜영·류연규·소마나오코·조순주·진미정. (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통계청. 2019. 2019년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9월 2일. 보도자료
- 통계청. 2022. 2021년 출생 통계. 8월 24일. 보도자료
- 통계청. 2022. 2021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12월 12일. 보도자료
- Blau, F. D., Kahn, L. M., & Waldfogel, J. (1999). Understanding Young Women's Marriage Decisions: The Role of Labor and Marriage Conditions. *Indus. & Lab. Rel. Rev.*, 53, 624.
- Bujard, M., & Scheller, M. (2017). Impact of regional factors on cohort fertility: New estimations at the district level in Germany.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 42.
- Letablier, M. T. (2003). Fertility and family policies in Franc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itotsubashi University.
- Murphy, M. J., & Sullivan, O. (1985). Housing tenure and family formation in contemporary Britai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3), 230-243.
- UNFPA. 2022. State of World Population 2022. New York: UNFPA
- Wilson, William J. (1987), *The Truly Disadvantag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oolcock, G., Gleeson, B., & Randolph, B. (2010). Urban research and child-friendly cities: a new Australian outline. *Children's Geographies*, 8(2), 177-192.